

프로그램

- 1:30 사회 박순성 / 동국대학교 교수
- 1:35 인사말
- 1:40 발표1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에 대한 대항과 새로운 아태지역 군비경쟁**
조셉 거슨 / 미국 친우봉사회
- 발표2 **동북아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중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 NGO의 입장에서**
리유 인투오 / 중국시민사회연대회의
- 발표3 **술 취한 일본 : 우파의 부상과 갈지자 핵 정책**
아키라 가와사키 / 피스보트
- 발표4 **군사기지 없는 필리핀 20주년 : 반추, 과제, 그리고 도전**
코라존 파브로스 / 전쟁중단동맹 필리핀
- 발표5 **대결과 억제에서 평화와 협력으로 :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3가지 제안**
이태호 / 참여연대
- 3:30 휴식시간
- 3:40 지정토론 김종대 /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
백학순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남주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성공회대 교수
- 4:40 전체토론
- 5:30 폐회

Program

1:30 Moderator **Sun Song PARK**, Dongguk University

1:35 Welcome Remarks

1:40 Presentation

1. **Countering Washington's Pivot and the New Asia-Pacific Arms Race** / *Joseph GERSON,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2. **How to establish peace in Northeast Asia and what will be the role of China : on the perspective of NGO** / *Liu YINTUO, China Association for NGO Cooperation*
3. **A “Drunken” Japan : The Rise of the Right and the Nuclear Limbo** / *Akira KAWASAKI, Peaceboat*
4. **Philippines No Bases @20 : Reflections, Challenges and Tasks** / *Corazon FABROS,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5. **From Confrontation and Deterrence to Peace and Cooperation: 3 Point-Plan to Give Peace a Chance in East Asia** / *Taeho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3:30 Coffee / Tea Break

3:40 Panel Discussion **Jongdae KIM**, Defense 21

Haksoon PAIK, Sejong Institute

Namjoo LEE, Sungkonghoe University

4:40 Floor Discussion

5:30 Closing Remarks

목차

발제1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에 대한 대항과 새로운 아태지역 군비경쟁 / 조셉 거슨	05
발제2	동북아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중국의 역할은 무엇 인가 / 리유 인투오	27
발제3	술 취한 일본 : 우파의 부상과 갈지자 핵 정책 / 아키라 가와사키	44
발제4	군사기지 없는 필리핀 20주년: 반추, 과제, 그리고 도전 / 코라존 파브로스	65
발제5	대결과 억지에서 평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 체제 형성을 위한 세가지 시민행동 제안 / 이태호	94
발표자 약력		131

Contents

Presentation1	Countering Washington's Pivot and the New Asia-Pacific Arms Race / <i>Joseph GERSON</i>	15
Presentation2	How to establish peace in Northeast Asia and what will be the role of China? —on the perspective of NGO / <i>Liu YINTUO</i>	35
Presentation3	A “Drunken” Japan : The Rise of the Right and the Nuclear Limbo / <i>Akira KAWASAKI</i>	53
Presentation4	Philippines No Bases @ 20 : Reflections, Challenges and Tasks / <i>Corazon FABROS</i>	78
Presentation5	From Confrontation and Deterrence to Peace and Cooperation: 3 Point-Plan to Give Peace a Chance in East Asia / <i>Taeho LEE</i>	111
Profile of Speakers		135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에 대한 대항과 새로운 아태지역 군비경쟁

조셉 거슨 / 미국친우봉사회

오바마의 재선으로 우리는 부시2세 당시 네오콘의 일방주의적 군사주의로의 회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내각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것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확정 후 처음으로 간 해외 순방국이 미얀마(버마), 태국, 캄보디아라는 점을 통해 앞으로도 워싱턴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군사적, 경제적 “회귀”가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가진 직접적 위험은 9, 10월에 매우 극명해졌다. 미국의 군사적 임무가 증대되면서 이에 고무된 일본 우파 신타로 이시하라 도쿄도지사가 일본과 중국을 전쟁 발발 직전의 상황까지 치닫게 한 다오위다오/센카쿠 섬 위기를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의 “회귀”를 이해하려면 고위 관료들이 부시 정부로부터 받은 유산이 무엇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유산 위에 무엇을 추구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동아시아 정세 선임국장을 역임했던 제프리 베이더(Jeffrey Bader)가 최근 회고록을 출판했다. 그는 조지 W. 부시와 그 측근들이 중국의 주변 지역을 따라 군 기지들을 배치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의 기지 집중도를 낮추고 아태지역 미군기지를 다양화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등장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9.11 알카에다 공격으로 부시와 체니는 그들의 관심을 중국 봉쇄에서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돌렸다. 그들의 목적은 비단 미래 테러 공격을 방지하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체니가 “21세기 정렬(the arrangement for

the 21st century)이라고 명명한 것처럼 석유가 풍부한 지역에서의 지배력을 다시금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시 정부는 소위 “테러와의 전쟁”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남부까지 확대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시아와 태평양을 대체로 등한시켰다. 이로 인해 아세안(ASEAN)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제적 궤도에 통합되는 등 중국의 영향력 증대의 길을 열어주었다.¹⁾

오바마의 아시아 정책은 대체로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되어왔다. 베이더는 정부의 우선순위를 이런 식으로 나열했다 : “아태지역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한다,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전시킨다,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전반적 존재감을 확대하고 지역에서의 전진배치를 유지한다… 그리고 지역기구들에 가입한다.” 즉 일방적인 방법이 아닌 다자간 방법으로 제국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회귀와 더불어 오바마 정부는 신냉전이라는 비용을 치르더라도 “아태지역에서 중국과의 헤게모니 경쟁 시도에 격퇴를 가하기로”한 결정을 보여주었다. 마틴 뎀시(Martine Dempsey) 미 합참의장은 “미군은 소련을 압도했던 것처럼 중국과 명시적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²⁾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아태지역 군비경쟁 시대에 돌입했지만, 그 누구도 전쟁을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확실한 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대신, 전구전략 전통처럼,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 새로운 기지가 형성되고, 새로운 무기가 배치되고, 새로운 합동군사훈련과 새로운 군사전략이 발표되는 등 그림자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지배력을 주장하기 위해 압도적인 힘이나 용납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이다.

군사동맹 강화, 군사기지의 확대와 다양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더불어, 미국은 중국 지도자들이 “역(逆) 만리장성(Great Wall in reverse)”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강화하고 있다. 즉 중국의 모든 잠재적 대양 접근을 차단하고 미국의 공대해 전투전략 수행을 위해 일본에서 호주에 이르기까지 방어벽을 치는 것이다.

1) Jeffrey A. Bader. *Obama and China's Rise: An Insider's Account of America's Asia Strateg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2012.

2) Op. Cit. Jeffrey A. Bader, p. 142

근거와 전략

미국의 탈냉전 전략의 중심은 클린턴 정부 당시 국제안보담당 국방부 차관보를 역임했으며 탈냉전 이후 미국의 아태지역 정책의 주요 입안자인 조셉 나이(Joseph Nye)의 분석이다. 조셉 나이는 부상하고 몰락하는 세력들 간 경쟁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해왔다. 20세기 동안 두 차례 미국과 영국은 독일과 일본을 세계 질서에 통합시키는 데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두 번의 재앙과 같은 세계대전이 야기됐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러한 종말을 불러올 역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국에 개입하고 동시에 중국을 봉쇄하는 정책을 미국이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냉전시대의 언어인 “봉쇄”라는 말은 적대적 미중 관계를 고정화시키지 않기 위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의도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제관계에서 “마피아” 이론을 연상시키는 언어와 1890년대 미국의 세계 제국건설에 착수했던 야심으로 “회귀”가 천명되기 몇 달 전, 조셉 나이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경제적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는 역사에 남을만한 지위로 되돌아갈 것이다. 미국은 그 곳에 존재해야 한다. 시장과 경제력은 정치적 프레임에 달려있고 미국의 군사력은 그 프레임을 제공한다”고 저술했다.³⁾

조셉 나이의 프레임과 경쟁적이면서도 상호의존적인 미중관계의 현실과 같은 연상상에서, 오바마는 중견 왕국 중국이 “그 프레임 밖에서보다 있는 것보다는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여하는 것부터 시작하기⁴⁾로 결론지었다. 오바마 정부는 “번성하는 중국이 미국에게 이득이다”⁵⁾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고 다양한 외교 통로를 통해 개입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 양쪽을 다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의 목표는 미소 간 냉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제국적 오만으로

3) Joseph Nye. “The Right Way to Trim”, *New York Times*, August 4, 2011, http://www.nytimes.com/2011/08/05/opinion/the-right-way-to-trim-military-spending.html?_r=0 emphasis added

4) Op. Cit. Jeffrey A. Bader. P.3

5) Anne Lowrey. “U.S. Stresses Concessions from China”, *New York Times*, May 3, 2012, <http://www.nytimes.com/2012/05/04/business/global/in-talks-us-highlights-economic-concessions-by-chinese.html>

한국, 오키나와, 그리고 일본 전역의 지역들, 그리고 아태지역 곳곳에 미군을 “전진 배치”한 엄청난 결과는 간과하고 있다. 베이더가 보고했듯, 오바마 정부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정책과 중국의 확신에 찬 행동들을 묵인하는 것은 그러한 나쁜 행동들을 대담하게 할 수 있게 만들며 (도쿄, 서울, 동남아시아에 퍼져있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협력국들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나칠 정도로 걱정을 사서했다.⁶⁾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미 국무장관이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주요 변화로 회귀를 발표했을 때, 그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다음 수십 년간 미국 국정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아태지역에 상당히 많은 외교적, 경제적, 전략적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개입을 증가하는 것은 “광범위한 군사적 주둔을 구축”함으로써 일부 동의될 것이라고 썼다.⁷⁾

그 후 얼마 안 되어 펜타곤은 새로운 “전략 안내서”를 발행했다. 이것은 이라크와 중앙아시아로부터 돌아오고, 아태지역과 페르시아만을 미국의 지정학적 우선순위 지역으로 명명했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임무를 강조하기 위해 클린턴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동맹국들과 태평양 국가들을 순방했다. 또한 오바마 정부의 첫 순방은 중국을 둘러싸고 고립시키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수상과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하와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 의회 의원들에게 “태평양 국가로써, 이 지역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있어 미국은 더 크고 장기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아태지역 전방배치는 “우리의 힘을 자유자재로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함께 더 광범위하게, 더 유연하게 배치될 것이다”고 연설했다.⁸⁾

그 결과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전략적 회귀를 위한 지렛목”으로써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의 군사동맹이 활성화되고 있다. 공대해 전투 원칙을 채택하면서 미 국방부는 핵무장 최첨단 해군력의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하기로 했다. 여

6) Op. Cit. Jeffrey A. Bader. P. 3

7)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10/11/americas_pacific_century

8) Elisabeth Bumiller. “Words and Deeds Show Focus Of the American Military in Asia”, *New York Times*, Nov. 11, 2012; Jon Letman, “Head of the Tentacled Beast”, *Foreign Policy in Focus*, October 31, http://www.fpiif.org/articles/hawaii_head_of_the_tentacled_beast. Emphasis added.

기에는 항공모함 6척, 해군의 순양함 대부분, 구축함, 연안전투함, 잠수함을 포함하며, 그리고 태평양에서의 한 층 신속한 해군 군사훈련과 기항을 포함한다.⁹⁾ 그리고 한국인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힘 중에서도 동북아의 핵심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 일본이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영토분쟁을 지속적으로 공식화하며 군사협력을 강화하도록 압박해왔다.

특히 경제력의 영향을 감안할 때 군사력 의존만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바마 정부는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넘어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TPP)”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 동맹국들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한편,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세계 최대의, 그러나 가장 힘든 자유무역지대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

중국도 무방비로 있지만은 않았다. 중국은 15개국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자유무역 지역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¹⁰⁾

또한 부정하고 있지만, 과거 부상했다가 지고 있는 세력간의 갈등 사례처럼 미중 전략 경쟁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시각도 미국 기업들 사이에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이며 정치적 안정도 마찬가지다. 이 점을 감안할 때 고전적 억제 이론에 바탕을 둔 정책을 가지고 있는 미국보다 중국에 이에 더 해당된다. 조공 제국의 역사처럼 중국은 분쟁 중인 남중국해로 공격적 확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한국, 인도처럼 해군을 현대화하고 있다. 이것 또한 태생적으로 공격적인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깃으로 고안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주와 사이버 상에서의 능력도 미국의 국가안보엘리트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현실정치 분석가 로버트 카플란(Robert D. Kaplan)은 이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중국은 19, 20세기에 겪었던 영토적 치욕에 여전히 사로잡힌, 부상하고

9) Jane Perlez. “Panetta Outlines New Weaponry for the Pacific,” New York Times, June 1, 2012, <http://www.nytimes.com/2012/06/02/world/asia/leon-panetta-outlines-new-weaponry-for-pacific.html>

10) Teddy Ng and Reuters in Geneva. “China set for East Asia trade bloc talks to stymie US”,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7, 2012, http://www.google.com/#hl=en&tbo=d&rlz=1W1GGLS_enUS509&scient=psy-ab&q=south+china+morn ing+power+China+set+for+East+Asia+trade+bloc&rlz=1W1GGLS_enUS509&oq=south+china+morn ing+power+China+set+for+East+Asia+trade+bloc&gs_l=hp.3...5658.19425.0.19658.62.53.0.6.6.2.1530.121 66.5j35j8j62j1j1.52.0.les%3B.0.0...1c.1.pQgXVIVYlrs&pbx=1&bav=on.2,or.r_gc.r_pw.r_qf.&fp=97592 9cab25e73ff&bpcl=38093640&biw=1293&bih=556

있는 미성숙한 세력이다. 중국은 미 해군이 동중국해와 연안 해역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비대칭적이고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직접 대항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중국의 목표는 미래에 미 해군이 확장할 때 두 번 생각하게 만들고, 첫 번째 해상방어선(First Island Chain)과 중국 해안 사이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세 번 생각하게 만들어 그것을 단념시키는 것이다.”¹¹⁾

영향

전쟁 위험의 증가와 더불어 미국의 회귀, 미국, 미국의 동맹국, 중국의 군사력 확장은 이 지역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다. 한국은 전시작전권 환수 연장으로 주권 침해가 계속되는 대가를 치렀다.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와 그 공동체들은 중국 해안에 근접하려는 미국의 시도 때문에 유린당하고 있다. 표면상 한국 해군 기지로 건설되고 있는 그곳은 “잠수함과 미국 이지스 구축함과 미사일 방어체제 장착한 군함 20척”을 수용할 것이다.¹²⁾ 그리고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부상하고 있는 일본 지도자들이 전범 역사와 “위안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일본의 15년간 침략의 폐해를 축소한 교과서를 계속해서 승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년 전 연평도에서 최고조에 달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보인 고압적인 태도 또한 문제이다. 베이징으로의 관문인 황해에서 조지 워싱턴 핵항공모함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 것을 중국이 미국에게 경고했음에도 미국은 군사훈련을 전개했다. 전 주중미국 대사 스테플턴 로이(Stapleton Roy)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한 것이다”라고 말했다.¹³⁾

일본에서 회귀는 핵동맹 재확인, 오키나와와 일본 전역에서 미국 군사력 강화, 그리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합동 정보수집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하토야

11) Robert D. Kaplan. *The Revenge of Geography*. New York: Random House, 2012, pp. 216-217

12) Jon Lettman, “Jeju Island Base Divides Korean, International Green Groups” Inter Press Service, August 10, 2012, <http://www.ipsnews.net/2012/08/jeju-island-base-divides-korean-international-green-groups>

13) Author’s notes. R. Stapleton Roy. Fifth China-US Symposium, Tufts University, March 8, 2011

마 전 수상이 오키나와에서 미 해병대 철군, 더 “균형 잡힌”, 미국에 “덜 의존적인” 외교정책, 미국의 핵 선제공격 정책을 종식하고 미국을 배제한 동아시아 지역(East Asia Community)에 대한 비전 등을 제시했던 것 등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외교적 전략을 개발하는데 실패했고, 이는 오바마 정부가 하토야마의 추락에 기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¹⁴⁾

동남아시아를 살펴보면, 오바마 정부는 석유와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남중국해에 대한 헤게모니를 둘러싼 경쟁을 바꿔놓았다. 그 결과 미국 내 많은 분석가들이 남중국해가 다가올 수십 년 동안, 또는 더 오랫동안 일축 즉발의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본다. 세계 무역의 40%를 차지하는, 더 중요하게는 중동 석유가 동아시아로의 가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영토분쟁 수역 대부분에 대해 중국은 군사적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항해 (미국이 강제했던) 자유항해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라고 선언하고 아세안-중국 간 갈등해결 외교를 약화시켰다. 필리핀의 “서필리핀해”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펜타곤은 마닐라에 무기 판매를 증대하고, 합동군사훈련을 촉진하고, 군사기지 복구를 모색했다. 회귀는 또한 미국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과의 군사관계를 강화하고, 이어서 합동군사훈련을 전개하는 것 등을 수반했다. “모든 국가들이 우방”이라는 정책 하에 하노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해군에게도 캄 란만(Cam Ranh Bay) 기지 접근권을 제공하고 있다.

좀 더 서쪽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과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 및 군사적 교류는 중국의 인도양으로 접근권을 제한하고 그 결과 연관된 중앙·남중국 경제 개발계획을 위협하는 것이다.

중국 둘러싸기의 완성으로 오바마 정부는 호주 다윈에 새로운 인도양 기지를 설립했고 인도와 암묵적 동맹도 추구했다. 그리고 뉴질랜드, 몽골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숫자는 아직 미정이지만 2024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유지하는 협정을 도출해냈다. 미국 가까이에 있는 괌의 차모르 사람들은 괌이 주요군사 허브가 되는 것을, 하와이는 3,000명 이상의 해병대, 오스프레이 수직이착륙기, 추가 기지 확장을 수용해야 한다.

14) Jeffrey A. Bader. Op. Cit. pp.42-47.

공동 및 인간안보로

우리는 불의와 위협의 원천을 규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극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국가 중심의 공동 또는 근본적 인간안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념과 전략은 한국과 다른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문화로 생성되고 양성될 것이다. 다음은 여러분의 생각에 기여하길 바라며 태평양 반대쪽 끝에서 온 나의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내가 불의와 전쟁 준비에 질색하는 만큼 전쟁의 대학살, 또는 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면 소위 현실정치의 몇 가지 요소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우리가 이 지역의 갈등 해결하는데 있어 제로섬보다는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공동안보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한다.

스웨덴 올라프 팔메 (Olaf Palme) 수상이 처음 제안한 공동안보는 베를린 장벽과 소련의 붕괴 이전 유럽에서 냉전의 종식을 촉진하기 위한 패러다임을 제공했다. 인간 안보를 위한 궁극적인 토대 역할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들을 공포에 대응해야 하는 주체로 본다.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감지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와 행동을 증대시킬 때, 이것이 다른 한쪽에서도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고, 이는 적으로 하여금 무기와 행동을 증대시켜, 방어적이거나 또 다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것은 군비경쟁을 상호적으로 강화하고 나선형으로 상승하게 만든다. 이것은 아태지역에서 미중관계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필리핀을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들 간에 목격되고 있는 그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각각이 공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 모든 공포를 포괄하는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하는 것이 공동안보의 대응 방식이다. 공동안보는 제국을 추구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제국은 궁극적으로 오직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만 그리고 미국처럼 우선순위를 잘못 배치하지 않았을 때만 극복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역사의 고통스런 유산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안보는 사람들의 필요를 국가주의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 동시에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과 국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지역의 자원과 교역 관계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한다. 6자회담 토대에 일부 만들어져 있는 동아시아 공동안보 체제를 위해

서는 대만과 한국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회담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의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완수될 때까지 충분한 지지, 시간, 외교적 공간이 필요하다.

둘째, 관련 있는 공동안보 접근방식 중 하나는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조약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유럽 대륙에 걸쳐 재래식 무기의 주요한 감축을 도출한 조약을 만드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고 어려운 외교였다. 그 결과 긴장이 약해졌고 미국/NATO 대 러시아가 전쟁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더 이상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는 오늘날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냈다.

만약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한 협상과 신뢰구축이라는 유럽의 경험을 아시아에 적용할만한 점들이 있다면, 이것은 탐구할 만한 길이다. 재래식 무기 생산과 판매 감축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던 중국 무기통제 및 군축협회(CACDA)에 대해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 중국 학자들이 이러한 생각에 열려있는 한편, 그들은 공포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중국에 앞서 서방국가들이 먼저 큰 폭으로 무기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¹⁵⁾

셋째, 우리는 사람들의 안보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 워크숍, 협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한결같고 용감한 활동가들이 제주에서 그 길을 가리고 있다. 바다를 건너 미군기지 철수 투쟁을 하고 있는 오키나와 사람들은 미일동맹 반대 구심점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 필리핀, 괌, 그리고 다른 아태지역 국가에서 기지반대 운동가들 간 연대의 증가는 외국 군대의 태생적인 “남용과 강탈”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유사하게 한국, 일본 각각과 미국이 맺은 상호방위 및 군사협력 조약들, 필리핀-미국 방문군지위협정, 그리고 19세기 불평등조약을 연상시키는 다른 조약들이 안보를 저해하고 사람들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1990년대 클린턴 정부가 중국의 부상에 집착하게 되고 탈냉전 봉쇄전략을 시작했을 때, 나는 저명한 한 아시아 학자에게 어떻게 하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지 질문했었다. 그의 답변은 지혜롭고, 간단명료하고 직접적이었다. 즉 전쟁을 벌이는 것이 불가능하게 모든 국가에 걸쳐 거미줄처럼 얽힌 인간관계를 만들라는

15) Correspondence between the author and Jason Tower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과 다른 아태지역 평화운동, 단체, 활동가들과의 관계 확대는 축복되고 축적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K-POP과 한국의 문화적 외교력의 소프트파워를 만드는 평화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연대의 관점에서 새로이 형성된 아태지역 평화와 비군사화를 위한 미국 실무그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 평화운동가들, 아시아계 미국인(한국계 미국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포괄적 환경에서 미국의 아태지역 군사화와 회귀에 대항할 수 있는 미국 내 평화운동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비전, 자원, 이니셔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연대, 정책변화, 네트워크 구성,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정전 60주년인 2013년을 아태지역 평화와 비군사화의 원년으로 부르고 있다.

공동 및 인간안보로의 길은 멀다. 우리는 그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 길을 만들어갈 것이다. ④

Countering Washington's Pivot and the New Asia-Pacific Arms Race

Joseph GERSON /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With Obama's reelection, we avoided the worst possible outcome, a catastrophic return to the neoconservative unilateralist militarism of the Bush II years. There will be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the Cabinet, but as President Obama signaled with his first post-election visit being to Myanmar, Thailand and Cambodia, the militarist and economic "Pivot" to Asia and the Pacific will remain Washington's highest foreign policy priority. The immediate dangers of this approach were all too visible in September and October when, encouraged by the increased U.S. military commitment, Tokyo's right-wing Governor Shintaro Ishihara sparked the Diaoyu/Senkaku island crisis that brought Japan and China to the brink of war.

To understand the Obama "Pivot", it may be helpful to know what and how senior Obama officials understood their inheritance from the Bush Administration and how they sought to build on that legacy. Jeffrey Bader, who served as Obama's senior director for East Asian affairs o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has recently published his self-serving memoir. He reminds us that President George W. Bush and company began in 2000 by promising to "diversify" U.S. Asia-Pacific military bases, reducing their concentration in Northeast Asia in order to distribute them more widely

along China's periphery. The September 11 Al Qaeda attacks led Bush and Cheney to turn their focus away from containing China to their wars in Central Asia and the Middle East. Their goal was not only to prevent future terrorist attacks, but to reconsolidate dominance in these oil-rich regions as they imposed what Cheney termed "the arrangement for the 21st century." The Bush administration did extend its so-called "war on terror" to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southern Thailand, but otherwise it largely neglected Asia and the Pacific. This opened the way for growing Chinese influence, including the acceleration of the integration of ASEAN and other Asian nations into China's surging economic orbit.¹⁾

Obama's Asia policies have been largely designed to compensate for China's rise. Bader listed the Administrations priorities this way: "Devote a higher priority to the Asia-Pacific Region. React in a balanced way to the rise of China. Strengthen alliances and develop new partnerships. Expand the overall U.S. presence in the Western Pacific and maintain its forward regional deployment.... and join regional institutions" which is to say return to multilateral, rather than unilateral, enforcement of Empire.

With the pivot, the Obama administration signaled its determination "to beat back any Chinese bid for hegemony in the Asia-Pacific," even at the expense of a new Cold War. As General Martin Dempsey,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put it, "the U.S. military may be obliged to overtly confront China just as it faced down the Soviet Union."²⁾ As we enter this era, Asia-Pacific arms races which include Japan and Korea as well as the great powers, none of the players seeks war, although tensions in the South China Sea could certainly spin out of control – especially between China and Vietnam. Instead, in the tradition of strategic theater, there is shadow play as new alliances are created, new bases built, new weapons

1) Jeffrey A. Bader. *Obama and China's Rise: An Insider's Account of America's Asia Strateg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2012.

2) Op. Cit. Jeffrey A. Bader, p. 142

deployed, new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new military doctrines announced, all with the goal of demonstrating overwhelming power or the ability to inflict unacceptable damage in order to assert regional dominance.

With its deepening military alliances,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military bases and negotiations for new free trade agreements, the U.S. is reinforcing what Chinese leaders see as a “Great Wall in reverse, “with the equivalent of guard towers stretching from Japan to Australia, all potentially blocking China’s access to the larger ocean”³⁾ and serving Washington’s air-sea battle doctrine

Rationales & Strategy

Central to U.S. post-Cold War strategy has been the analysis of Joseph Nye, President Clinton’s Deputy Secretary of Defense and a primary author of U.S. Asia-Pacific polic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Nye has long warned about the potential dangers of rivalry between rising and declining powers. Twice during the 20th century, he argues,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failed to integrate Germany and Japan into their world order, resulting in two catastrophic world wars. To avoid an apocalyptic repeat of this history, he has urged the U.S. to adopt policies that simultaneously engage and contain China, even as the word “containment”, with its Cold War echoes, is studiously avoided in official discourse in order not to crystallize antagonistic U.S.-Chinese relations.

Then, months before the “pivot” was launched, in words reminiscent of the “Mafia”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⁴⁾ and the ambitions that launched U.S. global empire in the 1890s, Nye wrote that “Asia will return to its

3) Robert D. Kaplan. Op. Cit. pp.214-215.

4) 1965년, 조지타운 대학 국제관계학 교수인 엘로 교수는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것은 마피아 가족 내 게임의 법칙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필자의 학창시절 노트

historic status, with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half of the world's economic output. America must be present there. Markets and economic power rest on political frameworks, and American military power provides that framework"⁵⁾

Consistent with Nye's framework and the realities of U.S.-Chinese competitive interdependence, the Obama Administration concluded from the beginning that by engaging China the Middle Kingdom can be led to play a more "constructive role than it would by sitting outside of that system."⁶⁾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repeated that "a thriving China is good for America"⁷⁾ and has pursued engagement via various diplomatic channels. BUT, it is hedging its bets.

Obama's goal is not to repeat the U.S.-Soviet Cold War. Yet, with imperial arrogance it is ignoring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of the "forward deployed" U.S. military in Korea, Okinawa, and communities across Japan and elsewhere in Asia and the Pacific. As Bader reports, the Obama administration resolved not to err on the side of "a policy of indulgence and accommodation of assertive Chinese conduct...[that] could embolden bad behavior and frighten U.S. allies and partners" in Tokyo, Seoul and across Southeast Asia.⁸⁾

Thus when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announced the Pivot as the major transformation in U.S. foreign and military policies, she insisted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of American statecraft over the next decade," will be "to lock in a substantially increased investment —

5) Joseph Nye. "The Right Way to Trim", New York Times, August 4, 2011,
http://www.nytimes.com/2011/08/05/opinion/the-right-way-to-trim-military-spending.html?_r=0
emphasis added

6) Op. Cit. Jeffrey A. Bader. P.3

7) Anne Lowrey. "U.S. Stresses Concessions from China", New York Times, May 3, 2012,
<http://www.nytimes.com/2012/05/04/business/global/in-talks-us-highlights-economic-concessions-by-chinese.html>

8) Op. Cit. Jeffrey A. Bader. P. 3

diplomatic, economic, strategic, and otherwise—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increased engagement, she wrote, would be underwritten in part by “forging a broad-based military presence.”⁹⁾

Shortly thereafter, the Pentagon published its new “strategic guidance,” reinforcing the pivot away from Iraq and Central Asia and naming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Persian Gulf as the Washington’s two geostrategic priorities. To emphasize these ostensibly new commitments, (recall that the first state visit arrang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was that of Indian Prime Minister Singh, signaling the commitment to surround and isolate China,) Clinton, Secretary of Defense Robert Gates, and President Barack Obama made high-profile visits to allied Asian and Pacific nations. Following the APEC summit in Hawaii, President Obama told members of Australia’s Parliament that “As a Pacific nation, the United States will play a larger and long-term role in shaping this region and its future.” And that U.S. Asia-Pacific forward deployments would be “more broadly distributed... more flexible – with new capabilities to ensure that our forces can operate freely.”¹⁰⁾

Thus we have the revitalization of military alliances with South Korea, Japan, Australia,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which serve as “the fulcrum for our strategic turn to the Asia-Pacific.” Having adopted an air-sea battle doctrine, the Pentagon has committed to deploying 60 percent of its nuclear-armed and high-tech navy to the Asia-Pacific. This includes “six aircraft carriers and a majority of the Navy’s cruisers, destroyers, littoral combat ships and submarines, [and] an accelerated pace of naval exercises and port calls in the Pacific.”¹¹⁾ And, as Koreans know all too well, in order

9)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10/11/americas_pacific_century

10) Elisabeth Bumiller. “Words and Deeds Show Focus Of the American Military in Asia”, *New York Times*, Nov. 11, 2012; Jon Letman, “Head of the Tentacled Beast”, *Foreign Policy in Focus*, October 31, http://www.fpiif.org/articles/hawaii_head_of_the_tentacled_beast. Emphasis added.

11) Jane Perlez. “Panetta Outlines New Weaponry for the Pacific,” *New York Times*, June 1, 2012,

to reinforce the northeast keystone of U.S. Asia-Pacific power, it has pressed Korea and Japan to transcend the deep wounds of history and continuing territorial disputes to formalize and deepen their military cooperation.

Recognizing that relying on military power alone is not a winning strategy, especially given the influences of economic power,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also pressed to go beyond the U.S.-ROK Free Trade Agreement with negotiations for a “Trans-Pacific Partnership.” The goal is to create the world’s largest and most demanding free-trade area in ways that deepen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U.S. and its Asia-Pacific allies while simultaneously reducing their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Hardly defenseless, China has responded with a campaign to create a 16-nation East Asia free trade bloc.¹²⁾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despite its denials, consistent with the precedents of tensions between rising and declining powers, there are many in the U.S. Establishment who view the U.S.-Chinese strategic competition as a zero-sum game. Yet, the reality is that given its need for regional peace to ensure continued economic growth, and thus political stability, it is China more than the U.S. whose policies are more rooted in classical deterrence theory. Consistent with its tradition of tributary empire, it is aggressively expanding into the disputed the South China Sea. And, like Japan, South Korea and India it is modernizing its Navy. It is also developing missiles designed to sink inherently offensive U.S. aircraft carriers, and its space and cyberspace capabilities are of increasing concern to the U.S. national

<http://www.nytimes.com/2012/06/02/world/asia/leon-panetta-outlines-new-weaponry-for-pacific.html>

- 12) Teddy Ng and Reuters in Geneva. “China set for East Asia trade bloc talks to stymie US”, South China Morning Post, November 7, 2012, http://www.google.com/#hl=en&tbo=d&rlz=1W1GGLS_enUS509&scient=psy-ab&q=south+china+morn ing+power+China+set+for+East+Asia+trade+bloc&rlz=1W1GGLS_enUS509&oq=south+china+morn ing+power+China+set+for+East+Asia+trade+bloc&gs_l=hp.3...5658.19425.0.19658.62.53.0.6.6.2.1530.121 66.5j35j8j62j1j1.52.0.les%3B..0.0...1c.1.pQgXVIVYlrs&pbx=1&bav=on.2,or.r_gc.r_pw.r_qf.&fp=97592 9cab25e73ff&bpcl=38093640&biw=1293&bih=556

security elite.

The realpolitik U.S. analyst Robert D. Kaplan explains why: “China is a rising and still immature power, obsessed with the territorial humiliations it suffered in the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ies. [It] is developing asymmetric and anti-access niche capabilities designed to deny the U.S. Navy easy entry into the East China Sea and other coastal waters...China is not remotely capable of directly challenging the U.S. militarily. The aim...is dissuasion...that the U.S. Navy will in the future think twice as it expands, and three times about getting between the First Island Chain and the Chinese coast.”¹³⁾

Impacts

In addition to increasing the risks of war, the pivot and the expansions of U.S., allied and Chinese military power have come at a price for the region's people. In Korea this has come at the expense of the continued undermining of sovereignty with the extension of U.S. wartime control of the ROK military. The World Heritage Site of Jeju Island, along with its communities, is being assaulted in order to take the U.S. naval challenge closer to China's coast. The massive, ostensibly Korean naval base being built there is to “accommodate submarines and up to 20 warships, including U.S. Aegis-equipped destroyers and their missile defense systems.”¹⁴⁾ And the U.S. is pressing Korea to deepen the alliance with Japan, even as Tokyo's rising political leaders continue to deny its history of war crimes and state responsibility for the sexual slavery of “comfort women”, and continues to certify school books minimize the impacts of Japan's Fifteen

13) Robert D. Kaplan. *The Revenge of Geography*. New York: Random House, 2012, pp. 216-217

14) Jon Lettman, “Jeju Island Base Divides Korean, International Green Groups” *Inter Press Service*, August 10, 2012,
<http://www.ipsnews.net/2012/08/jeju-island-base-divides-korean-international-green-groups>

Year War of aggression.

There is also the matter of the United States imperious response to China at the height of the Yeonpyeong Island crisis two years ago. Following China's warning that the U.S. not to conduc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USS George Washington in the Yellow Sea, which serves as the gateway to Beijing, the U.S. did just that. As former U.S. ambassador to China R. Stapleton Roy put it, "We poked China in the eye because we could."¹⁵⁾

In Japan the pivot has meant reaffirming the nuclear alliance, reinforcing U.S. military power in Okinawa and across Japan, and expanded joint intelligence operations targeted against China and North Korea. It is also worth remembering Prime Minister Hatoyama's commitments to winning the withdrawal of all U.S. Marines from Okinawa, to a more "balanced" foreign policy "less dependent" on the United States, to ending U.S. first strike nuclear policies, and his vision of an East Asia Community excluding the United States. He failed to develop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strategies needed to implement these changes, making possible the Obama Administration's contributions to his downfall.¹⁶⁾

Looking to Southeast Asia,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transformed competition for hegemony over the oil and mineral rich and geostrategically vital South China Sea into what many analysts in the U.S. see as the most dangerous tinder box for the coming decade, or longer. By responding to China's increasingly militarized claims to nearly all of the disputed territorial waters – across which 40 percent of the world's commerce and most importantly the Middle East oil essential to East Asia's economies passes – with its declaration that (U.S.—enforced) free navigation is a U.S. strategic priority, it has undermined ASEAN-Chinese conflict resolution diplomacy. Reinforcing Philippine claims to the "West Philippine Sea," the Pentagon has increased weapons sales to Manila, accelerated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15) Author's notes. R. Stapleton Roy. Fifth China-US Symposium, Tufts University, March 8, 2011

16) Jeffrey A. Bader. Op. Cit. pp.42-47.

is exploring the return of military bases. The pivot also entails strengthening U.S. military relationships with Indonesia, Singapore, Malaysia, Brunei, and Vietnam, with the latter engaging in joint military exercises. Hanoi, under its “friends with all nations” policy, is also providing access for U.S. and allied navies at Cam Ranh Bay.

Further west, President Obama’s visit and Washington’s renewed ties and military-to-military contacts with Myanmar threaten to restrict China’s access to the Indian Ocean and thus threatens related economic development plans for south central China.

Completing China’s encirclement,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established a new Indian Ocean base in Darwin, Australia, has pursued a tacit alliance with India, is expanding its “partnerships” with New Zealand and Mongolia, and has extracted an agreement to keep a yet-to-be-determined number of U.S. forces in Afghanistan through 2024. Closer to home, the Chamorro people are being clobbered as Guam is being transformed into a primary military hub, and Hawaii is to host nearly 3,000 more Marines, Osprey warplanes, and further base expansions.

Toward Common & Human Security

We are responsible not only to identify injustice, dangers and their sources, but to overcome them. The concepts and strategies that can lead to state oriented common and more fundamental human security in Northeast Asia will be born and nurtured by Korean and other regional nations’ political cultures. What follows are thoughts from the far side of the Pacific that may contribute to your thinking.

First, as much as I cannot abide injustice and preparations for war, I have moved to embrace some elements of so-called realpolitik if the carnage of war, or worse, is to be avoided. This leads me to suggest that we should

think about the possibilities of Common Security, seeking win-win rather than zero-sum resolutions to the region's conflicts.

Common Security, initiated by Swedish Prime Minister Olaf Palme, provided the paradigm that facilitated the end of the Cold War in Europe before the fall of the Berlin Wall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Even as it cannot serve as the ultimate foundation for human and people's security, it recognizes that nations as well as individuals respond to fear, that when one side augments its military arsenal and actions to respond to perceived threats from the other, that this will be seen as a threat by the other side, resulting in the enemy augmenting its arsenal and actions in a defensive but frightening response. This leads to a mutually reinforcing and spiraling arms race, not unlike what we now have in Asia and the Pacific, not only between the U.S. and China, but including Korea, Japan, the Philippines and a host of other Asia-Pacific nations. Common Security's response is hard headed negotiations in which each side names its fears, and diplomatic solutions are found which address the anxieties of all involved.

Common Security is inconsistent with the pursuit of empire, which ultimately can be overcome only by people's will and as a result of contradictions including,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misplaced priorities and imperial over reach

In East Asia, while not ignoring the painful legacies of history, Common Security could put people's needs ahead of nationalism, exploring ways to develop the region's resources and trade relations in ways that serve all the peoples and nations of the region. An East Asian Common Security framework, built in part on the foundation of the Six-Party Talks, would require new rounds of negotiations focused on Taiwan and Korea to ensure that the currents toward peaceful resolution of these conflicts have the support, time and diplomatic space needed to mature into fulfillment.

A related Common Security approach would be for the region's nations to explore what lessons can be taken from the Treaty on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The patient and difficult diplomacy that created the treaty resulted in significant reductions of non-nuclear forces across the European continent, led to reduced tensions and to today's environment in which fears of a U.S./NATO vs. Russia war are no longer taken seriously.

If it is found that Europe's experience with negotiated and trust-building conventional reductions has applications here in Asia, it is a path that could be explored. It may be helpful to know that the Chinese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ssociation, has held workshops about reducing production and sales of conventional weapons. While some Chinese scholars are open to the idea, they stress that given the imbalance of terror, any agreement would likely necessitate drastic cuts by Western states before China might be able to reciprocate.¹⁷⁾

Third, we know that there is no need to wait for research, workshops and negotiations to create what people need for security. Steadfast and courageous protestors on Jeju Island are pointing the way. Across the sea, Okinawan struggles for the withdrawal of U.S. bases have become the central contradiction in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growing solidarity between anti-bases struggles in Korea, the Philippines, Guam and other Asia-Pacific nations, are the most powerful force in overcoming the "abuses and usurpations" inherent to these foreign military occupations.

Similarly, there is the importance of teaching how the U.S. Mutual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treaties with Korea and Japan, the Visiting Forces Agreement with the Philippines and other arrangements reminiscent of the unequal treaties of the 19th century undermine the security and negatively impact people's lives.

Fourth, in the 1990s, when the Clinton Administration became preoccupied

17) Correspondence between the author and Jason Tower

with China's rise and initiated Washington's Post-Cold War containment strategy I asked an extraordinary Asia scholar how war could be prevented. His answer was wise, simple and direct: build webs of human relations across nations that make the idea of going to war impossible. In this regard, the growing ties between the Korean and other Asia-Pacific peace movements, organizations and activists should be celebrated and build upon. And, we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the peace making soft power of K-Pop and South Korea's cultural diplomacy.

In terms of solidarity the newly created U.S. Working Group for Peace and Demilitariz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should be noted. It brings together leading U.S. peace movement figures, Asian-Americans (especially Korean-Americans,) religious leaders and engaged scholars with the goal of providing vision, resources and initiatives to help build a U.S. peace movement capable of challenging the pivot and U.S. Asia-Pacific militarization in its comprehensive contexts. We are building strategies focusing on solidarity, policy changes, networking and education. We have called for 2013,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to be marked as The Year of Peace and Demilitariz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The path to common and human security is long. We make our road by walking it. ☺

동북아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중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 NGO의 관점에서

리유 인투오 / 중국 시민단체연대회의

동북아시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강한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는 또한 매우 효과적이고 긴밀한 협력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의 협력은 제도화되지도 않았으며 여전히 비영구적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동북아 지역 협력을 막는 주요 장애물은 약한 지역 정체성, 역사적 문제, 그리고 역내 불안정한 안보상황 등에서 기인한다. 지역협력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대중의 의견, 그리고 이념적 문제들에 영향을 받았고 지금도 종종 그렇다. 경제적, 사회적 혜택들은 교류 수준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2013년은 한반도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동북아에서 지속적인 평화상태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 평화구축에의 방해물을 찾아내고 짚어보기

유럽, 북미, 남미의 지역통합과 비교할 때 동북아시아의 지역통합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은 무역량이 적거나 상호보완적인 이점들이 미약하다거나 사회 간 상호교류가 적어서가 아니다. 다양한 정도로 동북아내 경제, 사회적 교류라는 통합 조건들

은 대개 이미 존재한다. 동북아에서 지역통합 과정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정치적 정체성의 결핍을 짚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장애물들에 관통하는 지역 정체성은 과연 어떻게 지역통합을 촉진시키는 핵심요소가 될 것인가?

오늘날 이미 존재하는 정치적 정체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동북아시아의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에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동북아는 문화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경험을 겪지 않았다. 일본에 의해 세워진 “대동아 공영권”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피해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에게는 지울 수 없는 부분이다. 이와 동시에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체제간의 차이점이 더욱 더 증대된다. 예를 들어 서구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 그룹에 속하는 일본과 한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길을 걷고 있는 중국에 의혹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치적 이념이라는 요소들은 국제관계와 중국의 외교정책과 전략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영토적 상황으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부분과 문화적 유산에 대한 인식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뿌리 깊은 차이점들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간의 닌자위다오 열도 분쟁, 또는 일본과 한국간의 독도 분쟁이 바로 그러한 예들이다.

두 번째로, 안전이라는 개념의 정체성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중국, 일본, 한국 사이에는 지역안보 개념에 대한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어느 쪽의 힘이 증가하게 되면 다른 편에게는 이것이 위협으로 느껴진다. 게다가 미일동맹,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은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지역안보와 관련된 일들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결국 안보이슈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공통의 위협이라는 외부 장애요소에 대한 대응과 공동의 안보라는 개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동북아 평화구축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미국은 최근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전략을 수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미국의 소위 “아시아로의 회귀”는 워싱턴가에서 전략적 이익이 달린

지역으로 묘사되는 이 지역으로 미 해군이 돌아오는 효시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는 중국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의 환경이 나빠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떠났던 적은 없었다.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을 밀어낼 의도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이란 측면을 포함해, 아태지역의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태평양은 두 강대국이 공존하고 협력하기에 충분히 넓은 곳이다. 중국 시민사회와 대중들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맡는 것을 환영한다. 중국 시민사회와 대중은 좋은 중미관계가 두 국가와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전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항상 믿어 왔다. 중국 시민사회는 미국 시민사회와 대화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높이며,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관계를 새로운 시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꺼이 함께 일하고자 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고,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폭넓은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지금의 힘과 영향력이 지속되는 한, 중국은 미국과 경쟁할 수 없고, 따라서 "중미 공동지배권"이라는 표현은 중국에게는 또 하나의 논쟁거리이다.

아시아에서 중국은 13억 인구를 가진 국가로, 커다란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가 아닌,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그러므로 미국의 아태지역 회귀를 촉구했던 주변국들에게 중국은 충분한 이해와 인내심을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의 지휘 아래 중국에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국가들에게도 중국은 충분한 이성과 자제심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주권과 영토적인 통합을 지키는 것은 중국 외교정책의 기본 요소들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 모두 국가의 기본 이익들을 지키려 할 것이다!

동북아 평화구축에서 중국의 역할 - 중국의 동북아지역 내 대외외교

여러 국가들의 여론에서 형성된 "중국 위협론"의 부상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최근 정치적 정체성 형성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대외외교를 점차 활발히

펼치고 있다. 대외관계 관련 중국의 대외외교에서는, 아태지역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성과들을 볼 때 아태지역 통합과정을 진척시키기 위해 대외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대외외교는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구현된다.

첫째로, 대외외교 강화를 위해, 지역협력 개념을 주장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언론 인터뷰, 당 활동 참가, 관광명소 방문 등의 현장 방문이나 대중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늘렸다. 어떤 면에서는 비공식적인 자리가 소통을 잘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다 대중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중일 간 교류에 대한 한 사례연구는 원자바오 총리의 일본 방문을 다루고 있는데, 지역 대학의 학생들과 야구하기로 한 특별 약속이나, 일본 청소년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 것, 일본의 한 농가를 방문하는 등의 활동은 일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한다. 2008년 5월에 방일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방일기간 동안 일본 경제 지도자, 우호친선 단체들, 청소년, 그리고 폭넓은 범위의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또한 일본 언론 인터뷰도 수락했다. 중일관계에 공을 들이기 위해 방일기간 단 5일 동안 그는 55개 일정에 참석하였다.

둘째, 언론에 대한 가이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적극적으로 미디어 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디어 외교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언론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은 앞으로 국제방송계에서 보다 강력해 질 것은 분명하며, 이를 위해 국제 방송국을 포함한 인프라와 외교적 의사소통, 기자 회견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든 측면에서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고 있다. 초국경 미디어와 미디어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론을 가이드 한다는 차원에서 중국은 점차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중간 미디어 협력에서 중국은 한국의 MBC 방송국, SBS 방송국과 이 밖의 여러 유명 언론사들이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여러 중국 내 도시들에 사무소를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의 미디어 외교를 강화했다. 이는 경제, 정치, 문화 등 생활 모든 분야 관련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의 통로를 통해 중국과 중국의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알려지는 것이 결국 아시아 그리고 다른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언론 간 교류와 협력은 각 국가들의 사람들 사이의 이해력을 높일 것이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히 해 주어 지역협력에 대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객관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길이 될 것이다.

셋째, 시민사회 단체들의 상호 작용과 교류 촉진. 국가 간 관계에서 편견은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교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사회의 교류는 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한중 두 나라간 특정 단체들은 교육, 문화, 역사, 환경 보호 등의 영역에서 심도 깊은 교류를 하기도 한다.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한중관계는 크게 향상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다. 중국과 한국은 양자관계를 전략적 협력관계로 격상시키고 특히 한중관계에서 양국 간 파트너십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는 양국관계 개선이 가속화되는 최근 추세를 분명히 보여준다.

핵 없는, 평화로운 아시아로 향하는 길을 위한 전략적 전망

우리 모두 알다시피,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화는 그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경제, 문화 그리고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화와 평화 간 관계 측면에서, 이러한 사실은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통적인 요소와 비전통적인 요소가 서로 관련이 있다.

핵 없는, 평화로운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주요 문제들

세계 제일의 국가가 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을 포함한, 많은 장애요소들이 존재한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사이에서 역사적 문제는 크게 인식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들 사이에서 문화적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냉전의 그림자는 여전히 정치 지도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핵지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려져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역사 문제, 문화적 차이, 그리고 냉전의 그림자들 같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여기서 필자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위에서 언급된 주요 문제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직면해야 할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다음에서 짚을 문제점들은 세계화라는 최근의 추세가 끝나기도 전에 나타난 것들이다.

따라서 평화를 구축하는 일은 세계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있다. 북반구와 남반구 국가들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 중 많은 수가 더욱더 빈곤해짐에 따라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마주하고 있다. 사실 빈곤 문제는 여전히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UNDP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하루에 미화 2 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고, 이 중 1천 2백만(1.2billion)의 사람들은 이보다도 적게 하루에 미화 1 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 마치 그 어떤 비극도 없는 듯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 세상은 인간의 고통으로 가득 차있다. 우리가 고통 받는 이들과 거의 마주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보다 진실에 가까운 말일 것이다. UN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

핵 없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위한 시민 사회 단체들의 역할

일반적으로 시민사회 단체는 많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받아들여진다. 여기 핵 없는 개발 관련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있다. 필자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4개국 예시를 들어보겠다.

1. 4개국 시민사회 단체 영향력

일본 시민사회 단체들의 영향력은, 예를 들어, 일본 군대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운동이나 일본 정부의 헌법9조 수정에 항의하는 활동과 같이 특정 이슈를 가지고 활동하는 “핵폭탄-수소폭탄반대 일본협의회(Gensuikyo)”, “피스보트(Peace Boat)” 같은 단체들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미국 시민사회 단체들의 영향력은, 카네기재단(Carnegie Foundation), 피스 링크(Peace link)와 같은 단체를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의 영향력은 물

론이고, 중국 시민사회 단체의 경우에도 중국평화군축인민위원회(CPAPD) 같은 단체를 통해 그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

2. 중국 NGO의 발전 - 개괄

이번 기회에, 필자는 중국에서의 NGO 상황을 소개하고 싶다. 중국 내 NGO의 공식 분류체계는 중국 성 회의에서 공포한 법을 기반으로 한다.(1951년 제정된 사회단체 등록 규정, 1998년 민간 비영리 단체 등록 규정과 2004년 재단 등록 규정) 중국 NGO는 사회단체, 민간 비영리 단체, 재단 이렇게 3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사회단체들인데, 이는 4개 하위 범주 즉 연맹뿐만 아니라 학술, 산업, 전문단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011년 말 기준, 중국에 등록된 NGO는 462,000개가 있다. 게다가 중국에는 산업 및 상업 기관들로 등록된 NPO, 풀뿌리 수준의 도시 지역공동체 단체들, 농촌 지역의 공공이익과 상호부조 단체들, 농업인 경제협력 단체들, 종교 그룹들, 외국의 자금지원을 받는 단체들, 해외 프로젝트 단체들, 주중외국상공회의소 등 많은 수의 미등록 NGO가 존재한다.(현재 1백만 개)

앞으로 나아갈 길(미래 전망)

우리는 핵 없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되기 위해 시민단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렬히 지지한다. 그 길은 서로 다른 분야 간의 대화를 통해, 개인과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소통을 통해, 또한 세계화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통해, 장기적으로 사람들과 모든 국가들에 이득을 가져다줌으로써,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단체들의 기여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할 때, 평화롭고, 비군사적 방법을 통해 핵 없는 아시아-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에 참여할 것을 CANGO를 대신해 밝히는 바이다. 그리고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6자 회담을 지원할 것이다.

핵 없는, 평화로운 행동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국가들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향후 잠재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전략적 사고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인맥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기업, 시민 사회

단체들 간의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중국에서 사람들은 항상 개발이 평화와 비핵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얻어지는 평화가 다시 개발을 보장한다고 믿고 있다. ④

How to establish peace in Northeast Asia and what will be the role of China? – on the perspective of NGO

Liu YINTUO, China Association for NGO Cooperatio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one of the world's most economically active regions. The countries in the region, through their geographic proximity, have strong economically complementary. Economic cooperation and exchanges with each other are also very effective, and closer cooperation has great potential. However,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s still in a non-institutional and non-permanent instability situation. Main obstacles restricting most of Northeast Asia's regional cooperation stems from weak regional identity, historical issues and unstable security situation in the region.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terms of promoting regional cooperation were and are often subject to public opinion and even ideological issues. Economic and social advantages do not play out at the exchange level.

The year 2013 marks the 60th year of ceasefire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We need to think more about how to establish long-lasting peace in Northeast Asia.

Identify and address impediments to establishing peace in Northeast Asia

Compared to integration in Europe, North America and South America, the slow pace of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is not because of less economic trade, weak benefits of complementary and less social interaction. To varying degrees, the conditions of integration of economic and social exchanges in Northeast Asia has almost existed. The most fundamental is addressing the lack of political identity in Northeast Asia, which is the most direct and pivotal factor to determine whether integration progress can go head. So how does regional identity across political barriers will become the key to promoting regional integration?

From two points of view, political identity still existing today is a big problem in Northeast Asia.

First, there exist differences on cultural values and identity. Northeast Asia has not undergone a reconstruction of cultural identity. The historical memory of the harm done by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which was built by Japan has been indelible for countries such as China and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differences in political systems further expand due to the differences about regional cultural identity. For instance, Japan and Korea as members of the most affluent countries in the West, have misgivings about China taking the road of socialist market-oriented economic system. These factors of political ideology influence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most basic views of China's foreign policy and strategy. In addition, the historical inheritance from the territorial status quo and awareness of the cultural heritage, East Asian countries maintain deep differences. Such as the Diaoyu Islands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or the Bamboo (living alone) Islands dispute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Second, there exist cracks in the identity of the safety concept. Among China, Japan and Korea there is no common view on the concept of regional security. Increase in power of any party is seen as a threat by others.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US-Japan Alliance, the US-ROK alliance has strong radiation in regional security affairs which further deepens the divisions, adding to distrust of the countries of the region on the security issue. Therefore, the long-term sense lacks response for the external challenges of common threats and a common security concept.

United States should do something meaningful for Northeast Asia peace-building

Recently, United States adjusted the Asia-Pacific strategy and increased investment in the Asia-Pacific. The United States' so-called "pivot" toward Asia may see a precursor of its navy return to the region, which is described by Washington as "part of strategic interests". On this, some people doubt if China and the US can live together in peace in the Asia-Pacific, even argued that China's environment had worsened. As a matter of fact, the United States never left the Asia-Pacific. China has neither the intention and nor the inability to push the United States out of the Asia-Pacific region. The United States could play a constructive role in the Asia-Pacific, including respect for China's core interests. The Pacific is wide enough for the two powers' coexistence and cooperation in the region. China Civil Society and public welcome the United States to play a constructive role for the peace, stability and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China Civil Society and public has always believed that a good Sino-US relations not only conforms to the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and peoples, but also is conducive to peace and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and the world. The China Civil Society is willing to work together with the Civil Society in the United States to strengthen dialogue,

enhance mutual trust, expand cooperation and advance the bilateral relations forward along the track of healthy and stable development in the new era.

The United States is the world's largest economy, has the world's largest military power and formed a broad coalition. As far as the current strength and impact, China cannot compete with the United States, so the "Sino-American condominium" is one more argument for China.

In Asia, China is a country of 1.3 billion people and has broad prospects for development. The United States return to the Asia-Pacific, but not to Asia. Therefore, for those neighboring countries who actively echoed even high profile calls on United States to return to the Asia-Pacific, China has demonstrated sufficient understanding and tolerance. For those countries who continue to give troubles to China under the United States orchestration, China has also maintained a sufficient reason and restraint. Therefore, safeguarding national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re the basic points of China's foreign policy.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will safeguard the basic interests of the State!

China's role in the construction of peace in Northeast Asia- China' s public diplomacy in Northeast region

In order to overcome the rise of the "China threat theory", formed in the public opinion in various countries, to promoting the formation of a political identity in recent years, the Chinese Government is increasingly active in public diplomacy. In China's public diplomacy on relations outstanding performance in dealing with Asia-Pacific countries, stressed public diplomacy in order to advance the process of regional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Specifically, China's public diplomacy in Northeast Asia is mainly embodied in the following three areas:

First, to strengthen public diplomacy, it advocated regional cooperation concept. In recent years, Chinese leaders' increased their out-of-office visits and direct contact with the public. Such as lecturing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other countries, to accept media interviews, to participate in party activities, to visit the tourist spots ,etc. In a sense it can be said that leaders in an informal setting create an image for communication and shape effects in the public is far more than in a formal setting.

A case study of Sino-Japanese exchanges in 2007 includes Premier Wen Jiabao's visit to Japan. A special arrangement with local university students to play baseball, face-to-face exchanges with Japanese youth, a visit to a Japanese farm, left a deep impression on Japanese people. In May 2008, President Hu Jintao during his visit to Japan, communicated with the Japanese economic leaders, friendship groups, the youth and a wide range of people. He also accepted the Japanese media's interview. To expound Sino-Japanese relations, in just 5 days of intensive programme he attended the 55 events.

Secondly, to strengthen the media guidance, China actively carries out media diplomacy. In order to continuously improve media diplomacy in Northeast Asia region, the Chinese Government's efforts increased its media investment. China will be stronger in international broadcasts and promoting "hardware" and "software" construction, improving infrastructure, including international broadcasting, diplomatic communications, press conferences etc. To strengthen transnational media and media diplomacy, China gradually expanded cooperation in the guiding of public opinion.

In the media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for example, China strengthened its media diplomacy, promoting Korea MBC TV station, Seoul Station and Asahi Shimbun and other media of many famous established offices in Beijing, Shanghai and other places. Through television, radio, the Internet and other platforms, on the economic, political, cultural and all aspects of life, all focused on China and China's development impact on

Asi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media will deepen understanding between the countries' peoples and clarify misunderstandings, thereby creating an objective public opinion in a friendly environment for regional cooperation.

Thirdl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romoting interaction and exchange.

In relations between countries, prejudice is more terrible than ignorance. The bright prospect of exchanges betwee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s wide. Civil society exchanges are beneficial to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and mutual trust. In particular people in the two countries focus on education, science, culture, histor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other areas of intensive exchanges.

China and South Korea relations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reas of the two countries have been greatly enhanced. China has become Korea's most important trading partner. China and South Korea will upgrade bilateral relations to strategic cooperation and partnership of the two countries, particularly in the Sino-South Korean relations. It clearly shows the trend of accelerating momentum.

Strategic view for A Path Toward a Nuclear-free and Peaceful Asia

As we know, the world is becoming one small village. Globalization has its effects on economy, culture and civil society with the final result that the gap between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world is widening.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ization and peace, it threatens global security, bo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factors are interrelated.

The main problems for achieving a nuclear-free and peaceful Asia

There are many challenges, including the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to rank first. The historical issue is not recognized among the members of the Asia Pacific. Cultural differences still exist among all members, the cold war shadow still influences the political leaders' decision making and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s not effective in terms of promoting a nuclear-free region.

We might have realized that there are various reasons causing these problems. But we can see that most of them have arisen in a long term, such as the historical issues,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shadow of the cold war. What I would like to mention here is, except for the main problems we raised above, there are still other challenges we have to face. In addition, the following ones have come into existence within the passage of the current pace.

So, peace-building faces the following challenges with regard to globalization: the gap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s widening, the developing countries are facing new difficulties and challenges as a growing number of them are being further marginalized. In fact, the poverty issues still prove to be a big problem. According to the UNDP report, half of the global population lives on less than 2 US dollars a day, and 1.2 billion of them live on less than 1 US dollar a day. Sometimes we act as if there is no tragedy existing in the world which, in fact, still has seas of human beings suffering. The truth is we rarely have eye contact with them. There is still so much to be done in terms of implementation of the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 a nuclear-free Asia & Pacific.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civil society organizations(CSOs) play very

important roles in many aspects. Here's the new angle we can see for CSO with regard to a nuclear-free development. I just want to give four countries' examples to demonstrate my point.

1. Four countries' CSO impact

The impact of Japan CSOs, for example, Japan Council against A & H Bombs (GENSUIKYO), Peace Boat, in particular issues such as not to permit the use of nuclear weapons by the military and action of Japanese CSOs against the change of "The Global Article 9" through Japanese government. The impact of USA CSOs, for example, Carnegie Foundation, Peace link etc. The Impact of Korean CSOs as well as the impact of China CSOs, for example, the Chinese People's Association for Peace and Disarmament, CPAPD etc.

2. NGO development in China - an overview

On this vital occasion,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NGO situation in China. The official classification of NGOs in China is based on the law promulgated by the State Council (the social organization registration regulation in year 1951, the private non-enterprise entities registration regulation in year 1998 and the foundation registration regulation in 2004). They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namely: social organizations, private non-enterprise entities and foundations. Most of them are social organizations, which can be put into four subcategories: academic, industri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federations.

There were 462,000 NGOs registered in China by the end of 2011. In addition, China also has a great number of NGOs not registered (one million at present), including NPOs registered with industrial and commercial authorities, urban community organizations at grassroots' level, public benefit and mutual aid organizations in rural communities, farmer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s, urban and rural religious groups, foreign-funded organizations in China, foreign projects in China, foreign chambers of commerce in China etc.

The Way Forward

We fully support steps forward to a nuclear-free Asia & Pacific, through dialogue among different sectors, communic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CSOs, strategic thinking on globalization, benefiting peoples and all countries in a long run, last but not least, CSOs' contribution and people's involvement.

On behalf of CANGO, we will participate in the action planning for a nuclear-free Asia & Pacific through peaceful, not military methods, considering the cultural diversity in Asia, and to support the dialogue among six parties for the Korean Peninsula on the nuclear issues.

In terms of nuclear-free and peaceful action planning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differences among the various countries and to promote strategic thinking as well as potential cooperation in the future. It is really important for us to establish personal contacts and to strengthen our networks, establish dialogue mechanisms among government agencies, enterpris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well as individuals. In China, the people always believe that development can support peace & nuclear-free action and that peace guarantees development. ☺

술 취한 일본 : 우파의 부상과 갈지자 핵 정책

아키라 가와사키 / 피스보트

들어가며 : 일본 민주당의 통치는 끝났다

2012년 12월 16일,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지진과 핵참사가 일어난 후 처음으로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이래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2009년 여당이 된 일본 민주당의 통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일본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을 잃을 것이며 전통적인 주류 보수당인 자민당이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신은 사람들 사이에 깊게 퍼져있으며 특히 세금, 경제, 사회복지 정책 분야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재난 이후 일어난 혼란은 정부에 대한 이러한 불신을 더욱 깊게 했다.

사람들의 좌절은 변화를 꿈꾸며 표를 쫓던 민주당이 사실상 어떠한 변화도 만들어나가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민당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민당 혼자서는 다수석을 차지하기에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다른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수많은 새로운 정당들이 생겨나고 있어 자민당이 다른 정당과 연합 정당을 꾸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다양하다. 많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을 두려워하며 탈당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정당을

구성하고 다시 서로 합당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너무 복잡해서 대략적 모습을 알아내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이 새로운 정당의 흐름은 실질적인 정책 논의 없이 인기에 영합하는 공약들로 만들어지고 있다.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

민주당과 자민당이 아닌 가장 눈에 띄는 제3정당은 오사카 시장인 하시모토 토루(Hashimoto Toru)가 설립하고 이끌고 있는 일본 유신회이다. 하시모토는 어떤 정치적 배경이 없는 방송인이었으나, 오사카를 포함해 지방 정부의 더 강한 자치권을 요구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또한 중앙 정부가 만든 다양한 규제들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성격과 “기존 권력에 맞서는” 거침없는 행동들은 현재 상황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다.

최근 이시하라 신타로(Ishihara Shintaro)가 다가오는 하원의원 선거 준비를 위해 유신회의 새로운 대표로 임명되었다. 이시하라는 지난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쿄 도지사로서 근무하면서 중국, 다른 아시아 이웃 국가들,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에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모욕적 언사를 자주 한 대표적인 극우파다. 그는 심지어 일본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심지어 공개적으로도 발언했다. 이 모든 발언들은 실질적으로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시하라의 생각을 나타내는 개인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상황을 볼 때 이러한 극우파들이 하원에서 상당한 의석을 획득할 수 있을 만큼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어 보인다. 하시모토도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시하라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포퓰리즘적 접근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고통을 해결하는데 자민당이든 민주당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널리 퍼져있는 사람들의 절망감 속에서 지지를 얻었다.

자민당의 경우, 선거에서 민주당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우편화된 보수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는 아베 신조(Abe Shinzo)가 자민당 총재로 다시 선출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자민당은 정식 군대 설치를 위해 헌법 9조를 개정할 것과 역사 교육을 “재건”하고 민족주의를 장려하기 위해 민족 교육을 개혁하자는 것과 같은 요구들을 내세우고 있다. 자민당 안에는 이러

한 극우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 우파들이 있지만 현재 일본의 정치적 상황은 그러한 중도 우파들이 저항할 수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우파들은 반정부적 정서를 지닌 대중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

영토분쟁

최근의 영토 분쟁은 위에서 설명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독도/다케시마나 센카쿠/다오위다오에 관련된 상황은 지난 몇 달간 한일, 중일 관계를 매우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영토 분쟁은 전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때에 따라 각 국가에서 이 이슈들은 뜨겁게 달아올라 사람들을 흥분시키기도 했지만 곧 진정되어 다른 이슈에 묻히거나 사라졌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국내정치용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이러한 이슈를 일부러 부각시키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심각하고 점점 더 파급력이 있다. 일본에서 이시하라의 센카쿠/다오위다오 섬을 “구입”하겠다고 중국을 도발하는 발언으로 인해 현재의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다. 이 섬은 일본의 실효적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만약 그의 의도가 영토를 보존하는 것이었다면 그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논리적인 납득할 수 없다. 실효적 지배를 하는 쪽이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 먼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최근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는 소위 영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의도가 뒤에 숨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일본의 경우, 포퓰리스트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들에게 “강한 일본”을 보여주려고 이 이슈를 이용한다. 일본의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중국과 한국의 성장은 일본 사람들 안에 숨어있는 라이벌 의식과 연관되었다. 이 정서는 쉽게 자극되고 불타오를 수 있다.

영토 분쟁을 자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어떠한 지역적 질서가 잡혀져야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다. 자극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역적인 비전을 대중들에게 제시하면서 평화와 공존, 협력의 원칙을 재확인해야만 한다.

무장갈등예방국제네트워크(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와 같은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원칙이 이러한 관점에서 알려져야 한다. 도쿄, 서울, 베이징, 대만, 홍콩,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2005년, “평화를 위한 지역 메커니즘 생성을 위해”라는 30쪽 분량의 GPPAC 동북아행동의제를 채택했다.¹⁸⁾ 이 문서는 “국가들 사이에 냉전이 여전히 잔존하는 지역은 동북아시아가 유일하다”라고 밝히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영토 분쟁들을 나열했다. 해당 문서는 또한 “동북아시아의 냉전이 실질적 무력 분쟁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대신 우리는 냉전을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협력적 메커니즘으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GPPAC은 정부들에게 논란이 되는 지역 내외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말 것, 분쟁지역에서의 훈련을 포함한 모든 군사 훈련을 종식할 것,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강화하고 증진시킬 것을 권고한다. 또한 시민사회에게는 사람 대 사람의 교환과 대화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 원칙과 권고사항들은 2012년 7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GPPAC 동북아시아지역 회의에서도 다시 강조되었다. 당시 회의는 지역 내 영토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 이제 이러한 말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이다.

GPPAC 의제는 또한 영토 분쟁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 교착 상태에서 “인권, 인간 존엄성과 인간 안보에 대한 우려가 국경과 사법권을 넘어서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분쟁과 관련한 모든 실질적인 결정들은 “지역 현실에 기반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통적으로 선주민들과 소수민족들이 수많은 분쟁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중요하다.

경제적, 역사적 범위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참고 자료는 2005년에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 ICG)에서 발표한 “위기에 대한 동북아시아의 암류”라는 보고서이다. 해당 보고서는 일본, 중국, 한국, 미국 정부에게 수십여 개의 사항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영토 분쟁이 ‘그 고유한 가치 때문에 일어나기보다는 주변 경제구역 때문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영토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공

18) http://www.peaceboat.org/info/gppac/agenda_0222e.pdf

동 개발과 필요한 경우 자원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영토에 대해 법에 기반을 둔 접근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진정으로 현명한 권고이다.

ICG의 보고서는 동시에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 문제들에 대해 조사하고 특히 “위안부”, 강제 노동, 전시 생체실험, 야스쿠니 신사 등에 관해 일본 정부에게 권고를 내렸고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일본의 식민지 착취를 찬양하거나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공개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두 가지 모두 그 지정학적 기원과 오늘날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소라는 역사적 이슈들과 현재 영토 분쟁 사이의 연관성은 명백해 보인다. 일본이 이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 후 이웃국가들에게 역사적으로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만 하는 일본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이 어쨌든 존재해 왔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러한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오늘날의 영토 분쟁이 증오 수준까지 확대되는데 일조했다.

이 지역에 대해 ICG는 “박물관 큐레이터들과 학자들의 위원회를 소집해 역사적 전시물들의 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이는 민족주의보다는 보편적인 인간들의 고통과 성과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주년이 다가오는 때, 민족주의 의제에 갇혀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동의 평화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과거를 다루는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동북아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미일 군사협력

이러한 민족주의 담론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일본의 군사 정책이 핵을 선택하는 것처럼 미국으로부터 독립성을 키우고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것보다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재의 길을 그냥 따라갈 능성이 높다. 미일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민주당과 자민당 모두 지속적으로 유지한 기본정책이다.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전 세계 미군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밝혔다.¹⁹⁾ 미국과 일본의 엘리트들은 2012년 아미티지 나이(Armitage-Nye) 보

고서가 제안한 바와 같이 “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²⁰⁾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해군력을 증강하는 적극적인 태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더불어 주요 걱정거리 중 하나로 등장했다. 일본의 기업가들은 우주와 미사일 관련 산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해관계로 이 의제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왔다.

그러나 강화되고 있는 일본의 민족주의는 현재 존재하는 흐름의 표면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예를 들어 우파 민족주의자들이 거리로 나가 센카쿠 섬과 관련한 시위를 벌일 때 민주당 정부는 “중국의 위협”에 대항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최근 배치된 오스프레이 수직이착륙기가 야기한 문제점들과 더불어 제기되는 위험들과 범죄발생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를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센카쿠를 봐, 우리는 오키나와에 기지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른 사례는 민주당이 현재의 헌법을 유지하자고 하는 반면 자민당과 유신회는 “미국이 부여한” 현재의 헌법을 버리고 군대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자들은 헌법을 건드리지 않고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군대와 시스템이 미국 군대에 더 동화되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다. 일본에서 거친 형태의 민족주의가 번성하는 것은 전통적인 미일관계로 나아가는데 좋은 조건을 형성한다.

표류하는 핵 정책

이제 후쿠시마 사태 이후 플루토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본의 핵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자. 2012년 6월, 일본 원자력에너지기본법이 개정되었고 “일본의 안전에 기여하는”이라는 문구가 일본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목적 부분에 새로이 삽입되었다. 이 개정은 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들에게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할 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나아가 몇몇 정치인들은 공식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는 것은 잠재적인 “억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일본의 원자력

19) President Obama's speech at Parliament of Australia, November 17, 2011

<http://www.smh.com.au/national/text-of-obamas-speech-to-parliament-20111117-1nkcw.html>

20) <http://csis.org/event/us-japan-alliance-anchoring-stability-asia>

발전 능력이 핵무기로 전환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기본법의 개정은 새로운 원자력규제위원회 설립과 관련이 있다. 새로운 위원회는 일본의 원자력 규제 체계가 경제산업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났다는 비판에 대응해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핵 안전(핵 기술을 무기의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 방지)과 핵 안보(핵 시설과 핵물질 보호)가 위원회의 역할에 포함되었으며 핵 시설로부터의 안전(자연재해로부터)을 보장하는 것도 위원회의 역할이다. 이 관점에서의 “핵 안보”는 일본어로 잘못 해석되었으며 개정안에는 “국가 안보”로 명시되어 있다는 연구가 있다. 그러므로 이는 기술적인 실수다.

이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로 하고 일본이 오늘날 실질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이는 원자력에 반대하는 대중의 의견에 반해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핵을 아예 없애자는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그 실효성이나 논리적 합당성과는 상관없이 갖다 붙이는 이유이다.

2012년 9월, 일본 정부는 일본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환경 전략을 채택했다. 이 결정은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것을 지지하는 대중들의 강력한 목소리 때문에 받아들여졌다. 이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9만 명의 대중들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한 다수가 원자력 발전소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6월과 7월, 원자력에 반대하는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도쿄 중심지에서 열렸고 약 16만 명에서 20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2030년이라는 목표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약했지만 1950년대부터 가장 발전된 친원자력 발전 국가였던 일본이 공식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겠다고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인 니혼 케이단렌(Nihon Keidanren)이 이끄는 기업집단은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자는 것에 저항하는 강력한 캠페인을 펼쳤다. 그들은 정부에 강한 압력을 행사했고 이는 새로운 에너지 환경 전략이 공식적으로 내각의 결정사항이 되는 것을 막을 정도였다. 만약 민주당이 12월 선거에서 진다면 이 전략은 새 정부에 의해 다시 검토될 것이다. 지금 현재 일본의 핵 정책은 위태로운 상태다.

재처리와 플루토늄

2012년 9월의 새로운 에너지 환경 전략의 가장 큰 모순은 이 전략이 한편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를 다 없애자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오모리 현에 있는 료카쇼 재처리 공장에서 사용한 연료를 재처리 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해 고속증식로에 사용해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속증식로는 “플루서멀(pluthermal)” 계획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어서 혼합산화물 연료(MOX)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공개적으로 이 “플루서멀” 원자로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플루토늄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플루토늄은 핵무기로 변환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우려를 자아낸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중요하다.

오늘날, 일본은 이미 44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35톤은 영국과 프랑스에, 9톤은 일본에 있다. 이 플루토늄이 어떠한 용도로든 사용될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이 정부는 핵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천명했다. 플루토늄이 향후 원자로에 사용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만약 료카쇼 재처리 공장이 가동을 시작한다면 추출될 플루토늄의 양은 매년 1,000개의 핵폭탄과 맞먹는 양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먼저 이는 일본이 핵무장을 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의혹을 자아낼 것이다. 둘째로 일본은 플루토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절도나 공격 같은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로 일본이 재처리를 계속하는 한, “재처리 주권”에 대해 커져가는 한국 내 목소리에 저항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에너지 협정을 개정해 실질적인 재처리 능력을 가지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과 북한이 핵연료의 재처리나 농축 능력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한 1992년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관련 대화를 엄청나게 후퇴시키는 일이다. (북한은 이미 해당 선언을 위반했지만 선언의 목적을 위해 헌신할 것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일본이 재처리를 계속하는 주된 이유는 “아오모리” 때문이다. 료카쇼 재처리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아오모리 현의 주지사는 재처리를 계속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재처리 프로젝트가 중단된다면 아오모리는 일본 전역의 전력 공

장에서 사용된 연료를 받지 않을 것이며 현재 가지고 있는 사용 연료도 원래의 공장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재처리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아오모리 현이 이렇게 행동하는 주된 이유는 재처리 정책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아오모리 현이 핵폐기물의 최종 목적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필요한 것은 갈 데가 없는 플루토늄 더미를 쌓아올리기 위해 재처리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다. 핵연료주기를 완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이 취해져야 하고 재처리 없이도 사용 연료가 안전하고 실현 가능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국제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다양한 옵션들이 이미 제시하였다. 만약 일본이 이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키고 경험을 쌓는다면 이는 또한 주변 국가들에게도 핵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주변 국가들에게 좋은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결론 : “술 취해” 걸어가는 일본

이 글은 최근 일본에서 터무니 없는 우파 세력들이 어떻게 부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지역의 평화를 저해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대로 이러한 우파의 움직임이 잘 계획되거나 조직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끔 이것은 전통적인 보수 의제들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또한 자기모순적인 원자력 발전 정책처럼 그릇된 정책의 한 증상일지도 모른다.

일본이 오늘날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발하기도 한다. 일본이 걸어가는 방향은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일본을 자리에 앉혀놓고 냉수를 줄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의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주장이 여기에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민들 간의 우발적인 폭력 충돌이나 대중적 인기로 지도자들의 잘못된 계산은 이 지역을 심각한 혼란 상태로 이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술주정뱅이”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㉔

A “Drunken” Japan: The Rise of the Right and the Nuclear Limbo

Akira KAWASAKI, Peaceboat

Introduction – End of the DPJ Rule?

On December 16, 2012, Japan will have the first general election of the Lower Hous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Diet) since the earthquake and nuclear disaster of March 11, 2011. This election will question on the whole the current rule by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which came into power in 2009 in the historic first change of government through voting in Post-WWII Japan. It is widely viewed that in the upcoming election, the DPJ will significantly lose seats and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 the traditional mainstream conservative party – is likely to come back into power. Mistrust against the DPJ government has become very deep among the public, particularly in terms of tax, economic, and social welfare policies. The post-disaster confusion served to further add to this sense of mistrust against the government.

The people's frustration is also caused by the fact that the DPJ, which was voted in by people hoping for change, was not able to actually implement

any such change. In essence, the DPJ turned out to be just like another LDP. That is why many now view that the LDP may also not be able to gain enough seats to come back into power alone, and will probably have to form a coalition with other parties. Coalition partner options are diverse, as a large number of new political parties are emerging in the current turmoil. Many DPJ Diet members are escaping from the party, in fear of losing the election. Many of these members are establishing new parties, which are now merging with one another. The range of these new parties is too complicated to even attempt to provide an overview. This new wave of political parties is driven by populist slogans without substantive policy debates.

Rise of Right-Wing Populists

The most remarkable of these “third” parties – ie non-DPJ and non-LDP parties – is the Japan Restoration Party (Nihon Ishin no Kai), which was founded and is now led by Osaka Mayor Hashimoto Toru. Hashimoto was formerly a television personality without any political background, but later entered politics, calling for stronger autonomy for local authorities such as Osaka, and for the elimination of various regulations put in place by the central government. His young and charismatic character, as well as his outspoken behavior to “fight the existing authorities,” has attracted many people sick of the status quo.

Recently, Ishihara Shintaro joined the Restoration Party as its new President, in preparation to run in the Lower House election. Ishihara is a well-known extreme rightist who has made countless insulting remarks against China, other Asian neighbors, women, disabled people and minorities throughout his service as Tokyo Governor for more than 13 years. He has even publicly spoken positively about Japan's nuclear armament many times. All those

remarks can be understood as a personal performance by the ideologue Ishihara, without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n Japan is allowing room for such ideological rightists to potentially gain enough support to secure a significant number of seats in the Diet. Hashimoto also shares similar ideologies to Ishihara in terms of Asian relations. Their populist approach for a “strong Japan” has been gaining support in the midst of wide-spread frustration at the government's continued failure, by both the DPJ and the LDP, to address economic and social difficulties faced by the people.

As for the LDP, it took the strategy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DPJ for the sake of the election, intentionally leaning towards the right and corresponding conservative policies. It was in this context that Abe Shinzo was re-elected as the LDP President. Under Abe's leadership, the LDP is accelerating such calls as for the revision of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to establish a full-fledged National Defense Army, and the reform of national school education to “restore” history education and promote nationalism. There are many modest conservatives in the LDP who do not necessarily support this pure-rightist approach, but the current political climate of Japan does not allow them to resist. In sum, ideological rightists are enjoying the boost given by the general anti-government sentiments of the people.

Territorial Disputes

The recent territorial debates need to be understood in the above context. The situations over Dokdo/Takeshima and Senkaku/Diaoyu have been making Japan-Korea and Japan-China relations very serious in the past months. These territorial disputes are not new at all. These have emerged as hot issues and excited people in each country from time to time, but have been settled in some way and put aside, fading away from the surface.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s particularly serious because of the existence of certain entities that intend to escalate the issues for their domestic purposes/ These elements are gaining more significant influence. For Japan, Ishihara was the initiator of the current trouble with China by his provocative move to “buy” the Senkaku/Diaoyu Islands. The islands are now in effect controlled by Japan; thus there is no logical explanation to take such a risky action if the intention was to preserve the territory. It is remarkable in the recent disputes in East Asia that the entities which are in effect administering the areas under dispute are themselves daring to initiate actions to trigger troubles. This clearly shows that there are agendas at play other than just the conservation of territory per se. In the case of Japan, the populist forces are using the issue to demonstrate a “strong Japan” to the public, who are suffering from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The long lasting economic decline of Japan and the growth of China and Korea have given root to silent sentiments of rivalry within the Japanese people . This sentiment can be easily lit and fired.

Those who escalate the territorial disputes never present a vision of how to resolve the issue, in what direction to go, and what regional order should be built, because escalation itself is their objective. Civil society groups in the region must reaffirm the principles of peace and co-existence and cooperate in presenting a region-wide vision to the public.

The principles that such regional NGO networks as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have advocated should be recalled in this regard. The 2005 Northeast Asia Regional Action Agenda of GPPAC is a 30-page document titled, “Towards creation of a regional mechanism for peace” that was adopted by non-governmental activists and experts from Tokyo, Seoul, Beijing, Taipei, Hong Kong, Ulaanbaatar and Vladivostok. This document states that “Northeast Asia is the only region in the world with Cold War remaining among states,” listing various territorial

disputes in relation to this.¹⁾ The document also warns, “Cold War in the region should never escalate into actual armed conflict. Rather, we must strengthen our efforts to replace the Cold War with a cooperative mechanism for peace in the region.”

GPPAC recommended the governments to refrain from making any actions which would escalate the tensions in and around the disputed areas, to end all military activities including exercises in hotspots, and to strengthen and promote demilitarized zones (DMZs). It also recommended civil society groups to expand people-to-people exchanges and dialogue. These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were reiterated in the latest regional meeting of GPPAC in Vladivostok in July 2012, which focused on territorial issues in the region and civil society actions to resolve them. Now is the time to put these words into action.

The GPPAC Agenda also pointed out that in any political stalemates including territorial disputes, “human rights, human dignity and human security concerns should take precedence over national boundaries and jurisdiction,” and that any substantive decisions on the disputes “should be based on local realities and reflect the voices of local populations.” These points are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of the traditional presence of indigenous people and minorities in many of the disputed areas.

Economic and Historical Dimensions

Another reference to take note of is the 2005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ICG), titled “North East Asia's Undercurrents of Conflicts.”²⁾ It listed dozens of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s of Japan, China,

1) http://www.peaceboat.org/info/gppac/agenda_0222e.pdf

2) <http://www.crisisgroup.org/en/regions/asia/north-east-asia/108-north-east-asias-undercurrents-of-conflict.aspx>

South Korea and the US, pointing out that the importance of most of th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region “lies not so much in their intrinsic value, but in the surrounding economic zones,” and therefore recommending “to leave aside territorial issues and focus on joint exploitation and, as appropriat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It is indeed wise to focus on the practical aspects of economy when law-based approaches on territories themselves are not realistic to pursue.

The ICG report equally investigated the historical issues in the region and presented a set of recommendations to the Japanese government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comfort women”, forced laborers, biological warfare experiments, and the Yasukuni Shrine, and cautioned its political leaders against “public statements which praise or downplay Japan’s colonial exploits.”

The link between the historical issues and the present territorial disputes is obvious, both in their geopolitical origins and as factors affecting the problems today. It is no doubt that Japan bears the greatest responsibility in this situation. But it must also be noted that the inevitable trends of time, worsened by the failure of education, are now undermining the very foundation amongst Japanese intellectuals and leaders regarding sensitivity considering history and Japan's neighbours, a foundation that has existed as a base line for post-WWII Japan. The deterioration of historical understanding has helped the process of today's territorial disputes escalating to such a degree of hostility.

One of the ICG recommendations for the region was to “convene a committee of museum curators and scholars to develop agreed standards for historical exhibitions, with the goal of focusing displays on universal human suffering and accomplishment, rather than nationalism.” A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W-II approaches, it is vital for civil society groups in the region to intensify their joint efforts to deal with the past, searching for a common peace and preventing the remembering of history

to be trapped by nationalistic agendas.

US-Japan Military Cooperation

Despite the rise of such a nationalistic discourse, Japan's actual military policy is likely to follow the existing path and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US rather than building up its own forces, such as pursuing a nuclear option independent of the US. Strengthening Japan-US military cooperation has consistently been the baseline policy under both LDP and DPJ rule. Now the US President Obama has declared Asia Pacific as “a top priority” for the US forces worldwide.³⁾ The Japanese and US elites seem solidly unified to strengthen their military cooperation for the purpose of “anchoring stability in Asia,” as proposed by the 2012 Armitage-Nye report.⁴⁾ China's military build up and its increasingly assertive behavior regarding naval interests is presented as one of the major concerns, in addi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 Japanese business community has also consistently pushed this agenda, seeking interests in developing a space and missile-related industry.

The emerging wave of Japanese nationalism, however, would function to provide a merely cosmetic addition to the existing trend. For example, while the right-wing nationalists go out in the streets to demonstrate for the Senkaku Islands, the DPJ government reiterates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US bases in Okinawa in light of the “China threat,” persuading people that there is no other choice than to accept the US bases despite all the accompanying crimes and dangers, including those added by the recently deployed Osprey aircraft . In short, there is a combination of “Hey, look at Senkaku, we need the bases in Okinawa.” Another example is that the LDP

3) President Obama's speech at Parliament of Australia, November 17, 2011
<http://www.smh.com.au/national/text-of-obamas-speech-to-parliament-20111117-1nkew.html>

4) <http://csis.org/event/us-japan-alliance-anchoring-stability-asia>

and the Restoration Party speak up in favor of abandoning the present “US-imposed” Constitution to establish a National Defense Army; while the DPJ says that they would keep the present Constitution. The DPJ leadership has had a plan, however, to allow exercise of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even without touching the Constitution itself, in order to allow Japanese forces and systems to become more integrated into the US military architecture. The rise of rough nationalism in Japan is thus creating good conditions for the traditional Japan-US agendas to be pushed forward.

A Floating Nuclear Policy

Let me now examine Japan's post-Fukushima nuclear policy, with a focus on the plutonium issue. In June 2012, Japan's Fundamental Law of Nuclear Energy was revised and the new phrase of “contributing to Japan's security” was inserted into the objectives of the country's nuclear energy policy. This revision sparked an allegation, especially among neighbors in Asia, that Japan might intend to develop nuclear weapons. Moreover, some politicians have publicly mentioned that the retention of nuclear power plants would constitute a potential “deterrent,” implying a potential hidden agenda of Japan to convert its nuclear power capability into nuclear weapons.

The revision of the Fundamental Law wa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This new Commission was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n response to wide-spread criticism that Japan's nuclear regulatory regime was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 thus a root cause of the Fukushima accident. Nuclear safeguards (the prevention of the conversion of nuclear technologies into weapons purposes) and nuclear security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facilities and materials) were included as the mandate of the Commission, in addition to ensuring safety (against natural disasters)

of the nuclear facilities. There is a study report that “nuclear security” in this regards was somehow misinterpreted into Japanese and appeared as “national security” in the revised law. It was thus a technical error.

Pending a detailed examination of this story, there is no ground to judge that Japan has a concrete nuclear weapons program as of today. Rather, it is much more precise to understand that those who want to retain nuclear power, against the growing anti-nuclear power public opinion, are employing whatever reasons they can use to resist a nuclear-zero policy, regardless of their validity or logical integrity.

In September 2012, the Japanese government adopted its new Energy and Environment Strategy, in which Japan would aim for zero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by the 2030s. This decision was made upon the push by the strong public opinion in support of zero. Of the 90,000 public comments submitted during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strategy, a vast majority supported zero. In June and July 2012, a series of massive anti-nuclear demonstrations were organized in the center of Tokyo, with 160,000 to 200,000 people in attendance. The target of 2030s is much weaker than the expectation of the people, but it was still very significant that Japan, which has developed into one of the most advanced pro-nuclear power countries since the 1950s, officially decided to aim for a phase-out of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the business community led by Nihon Keidanren (the national federation of business leaders) has started a strong campaign to resist the zero policy. They put heavy pressure on the government, so strong that the new Energy and Environment Strategy could not be made as a formal Cabinet decision. If the DPJ loses power in the December election, this Strategy will be reviewed by the new government. Japan's nuclear policy is in limbo at this moment.

Reprocessing and Plutonium

The biggest contradiction of the new Energy and Environment Strategy of September 2012 is that it aims for nuclear zero on one hand, but on the other declares to continue the reprocessing of spent fuel at the Rokkasho Reprocessing Plant in Aomori Prefecture. Japan originally planned for a nuclear fuel cycle that separates plutonium from spent fuel and uses it in fast breeder reactors. However, the fast breeder reactor plan has turned out to be a de facto failure, due to technical and economic reasons. Japan then turned to the “pluthermal” plan, to mix the plutonium with uranium and use it as MOX fuel. The Japanese government has publicly explained that it would not possess any excessive plutonium other than for the purpose of use in these “pluthermal” reactors. Plutonium can be converted to nuclear weapons, and is a matter of international concern. Its accountability is therefore crucial.

As of today, Japan already has about 44 tons of separated plutonium - 35 tons located in the UK and France, and 9 tons within Japan. There is no prospect of the use of this plutonium for any purpose. And the government has now declared to aim for zero nuclear. The case that the plutonium will be used in reactors in the future is no longer at all valid. If the Rokkasho Reprocessing Plant were to start full operations, the amount of plutonium to be separated would be equivalent to 1,000 nuclear bombs per year.

This poses serious international concerns. First, it will add another case for allegations, unnecessarily, of Japan's nuclear armament. Second, the physical protection of plutonium is vulnerable in Japan, and scenarios such as theft or attack cannot be ruled out. Third, as long as Japan sticks to reprocessing, it will be hard to resist the growing arguments in South Korea for “reprocessing sovereignty.” South Korea is seeking the revision of the Korea-US nuclear energy pact to allow a virtual reprocessing capability. Such a move would fundamentally undermine the 1992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which North and South Korea

agreed not to possess enrichment or reprocessing capability of nuclear fuel. This would be a great setback against progress in the denuclearization talks of the Peninsula. (North Korea has already violated the Declaration, yet has not canceled its commitment to the Declaration's goal.)

The substantive reason behind Japan's continuation of reprocessing is the "Aomori problem." The Governor of Aomori Prefecture, where the Rokkasho Plant is located, has consistently called for the continuation of reprocessing. He has publicly warned that Aomori would stop accepting any more spent fuel from power plants all over Japan and even start to send the existing spent fuel back to the original plants should the reprocessing project be stopped. The Japanese government wants to avoid such a scenario, and is thus trying to keep the reprocessing project going.

The core reason for Aomori's behavior is to avoid a situation that the prefecture will automatically be forced to be the final destination of nuclear waste deposition should the reprocessing policy end. What is needed is not to continue reprocessing just to increase plutonium stockpiles that will go nowhere. The real action to take is to decide to end the nuclear fuel cycle policy, and to work for the safe and feasible storage of spent fuel without reprocessing. Furthermore, alternatives must be launched for Aomori to develop without the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Various viable options have already been put forward by international experts. If Japan advances the studies and experiences in these fields, it will provide good resources for neighboring countries to also follow in their pursuit to become nuclear-free.

Conclusion – Japan Walking “Drunken”

This report tried to present how the grotesque right-wing movement is growing in Japan these days, and how it is destabilizing the regional peace.

But as described above,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such right-wing moves are not well planned or organized systematically. Sometimes, it is combined with and supplements the traditional conservative agenda. Yet it can also be just a symptom of flawed policies, such as the self-contradictory nuclear power policy.

It will be good to understand that Japan is now walking “drunkenly.” This is surely very dangerous, as well as provocative towards others. The direction in which it is headed cannot be foreseen. So, it is necessary to now make Japan sit down and give it some cold water – sound and sharp arguments by civil society groups should be effective for this. But at the same time you need to caution against any accidents. An accidental violent clash amongst citizens, or a miscalculation by populist leaders may wrongly lead the region into a serious turmoil. And last but not least, such “drunkards” need to be dealt with gently, and with patience. ☺

군사기지 없는 필리핀 20주년 : 반추, 과제, 그리고 도전

코라존 파브로스 / 전쟁중단동맹

2012년 11월 24일은 미국이 필리핀에서 모든 군사기지를 철수하겠다고 밝힌 지 딱 20년이 되는 날이다. 1945년에 체결한 마-필리핀 군사기지협정이 만료됐을 때 필리핀 상원이 새로운 협정 체결을 부결한지 일 년 뒤인 1992년 미군은 철수되고 기지는 폐쇄되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역사적 위업이자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1901년부터 필리핀에 있었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주둔 미 해군기지 및 공군기지의 해체이자 폐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1991년 9월 16일, 필리핀 상원이 새로운 군사기지협정을 거절할 당시, 미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필리핀 애국자들은 그 날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로 여긴다. 그 날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미국의 식민지 시절까지, 그리고 1946년 필리핀이 독립한 이후에도 지속된 470년간의 외국 군사기지의 존재와 외국 군대의 주둔에 종지부를 찍은 날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오키나와, 한국, 호주, 뉴질랜드, 괌 그리고 유럽의 몇몇 지역을 포함해 여전히 외국 군사기지가 존재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필리핀의 성공사례를 교훈 삼아 그들의 투쟁의 본보기로 삼으려 했다는 점을 필리핀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다.

역사적 배경과 미군기지 폐쇄의 중요성

스페인 식민 통치로부터 성공적으로 독립한지 일 년도 채 지나지도 않았을 때 미국이 필리핀을 침략하고 점령한 필리핀-미국 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당시 처음으로 미군기지가 필리핀에 세워졌다. 거의 한 세기 동안 필리핀에 주둔하던 미군기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활동 중심지였으며 보관소, 연료 공급지, 정비소, 훈련소, 통신소 등으로 사용되었다.

1992년 전, 미국은 필리핀에서 총 7개의 군사 시설을 점거하고 사용했는데 그 중 클락 공군기지와 수빅 해군기지가 가장 큰 규모였으며 그 기능과 지리적 위치 측면에서 가장 요충지로 꼽혔다.

기지 이름	위치	전체 면적	기능
1. 존헤이 공군기지(John Hay Air Station)	바기오, 벤구엣(Baguio City, Benguet)	695 헥타르	통신, 훈련, 휴식 및 오락 (Communications, Training, Rest & Recreation)
2. 캠프 월레스 공군기지(Camp Wallace Air Station)	산 페르난도, 라 유니온(San Fernando, La Union)	202 헥타르	훈련, 통신 Training, Communications
3. 미국 해군 라디오 방송국 (US Naval Radio Station)	카파스, 탈락(Capas, Tarlac)	356 헥타르	통신, 훈련 Communications, Training
4. 산 미구엘 해군 통신 기지국(San Miguel Naval Communications Stations)	산 안토니오, 잠발레스(San Antonio, Zambales)	1,112 헥타르	통신 Communications
5. 오도넬 전송국 O'Donnell Transmitter Station	카파스, 탈락(Capas, Tarlac)	1,756 헥타르	통신, 훈련 Communications, Training
6. 수빅 해군기지 Subic Naval Base	수빅만(Subic Bay)	6,658 헥타르	무기 창고, 훈련, 통신, 항만수리시설, 해군 Weapons Depot, Training, Communications, SRF, Navy
7. 클락 공군기지 Clark Air Base	팜팡가(Pampanga)	4,440 헥타르	무기 창고, 훈련, 통신, 공군 Weapons Depot, Training, Communications, Airforce

팜팡가와 탈락 지역에 드넓게 있는 클락 공군기지는 싱가포르와 맞먹는 크기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기지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로 유명하다. 클락기지는 미 공군이 사용할 수 있는 250만 갤런에 해당하는 석유, 기름, 윤활유를 저장할 수 있으며 200,000m²에 달하는 공간에 탄약을 저장할 수 있다.¹⁾

수빅만은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심해 항만이다. 1884년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으로 수빅만에 해군기지를 건설했고 1904년 미국이 이를 점령했다. 그리고 1906년 현대식 선박수리시설을 겸비하게 되었다. 미 해군의 수빅기지 가동률이 최고조일 당시, 수빅기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보급창이었으며 매달 백만 배럴에 달하는 연료를 취급했다. 미군은 백 개의 전쟁에라도 공급할 수 있는 연료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또한 수빅기지는 아시아 지역의 모든 미국 전함을 수리할 수 있는 주요 선박 수리시설로도 활용되었다.²⁾

필리핀 상원이 새로운 군사기지협정을 부결함에 따라 미국 군대는 우연히도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한 1992년 두 군사 기지를 폐쇄했다. 피나투보 화산이 분출하자 팜팡가 지역 주민 일부는 클락 공군기지 통신센터(CABCOM)에 위치한 12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에 임시 거주지를 부여 받았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약 20,000 가구가 CABCOM 내에 임시 거주했다. 해당 가구들은 정부가 제공한 다른 정착지로 옮겨가기 전까지 그 곳에서 약 3년에서 5년가량 거주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나투보 화산 분출 덕분에 기지를 폐쇄시켰다고 말한다. 화산 분출이 기지문제로 인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는가? 믿거나 말거나 마치 신이 내린 선물처럼 600년 동안 휴화산이었던 피나투보산은 1991년 6월 12일 필리핀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바로 그 날 폭발했다. 현실에서는 피나투보산 화산폭발은 기지 반대하던 상원의원들이 즉각적 기지폐쇄 요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피나투보 화산의 분출로 인해 센트럴 루존 지역이 겪게 된 어려움과 혼란 때문에 기지를 반대하는 상원 의원들은 19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상정된 새로운 군사기지 조약을 부결시키는 데에는 상원의원 12명이면 충분했다. 표결 당시 그들의 입장을 고수한 12명의 상원의원들은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12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핸드프린팅 복제품은 수빅만 관리청 사무소 중앙 건물 앞에 그

1) Virginia Guevarra, et al. vs. USA Department of Defense, et al." at <http://www.yonip.com/YONIP/Articles/Clark.html>

2) 전개서.

들을 기념하는 주요 기념품으로 남겨져 있다.

이전 기지가 남긴 유산

수빅만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 군사기지의 안팎에 흐르는 강의 지류 및 강 주변에 거주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서 희귀질병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한편 CABCOT에 정착한 사람들은 식수의 맛이 이상하고 기름기가 끼어 있는 것을 알아챘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시작하자 필리핀 비핵동맹(Nuclear Free Philippines Coalition) 산하 미군기지정화위원회(People's Task Force for Bases Clean Up)가 해당 지역의 건강 관련 사건들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사례들의 발생률이 높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독물학자, 전염병학자를 포함해 필요한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들이 환경과 건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미국의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로비를 하고 정보활동을 전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이 필요했다. 수빅만 강의 지류는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물놀이도 할 수 있는 생존과 지하수의 원천이었다. CABCOT에 정착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203개의 얕은 우물 펌프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정착민들은 자신들이 정착한 지역이 미군이 엔진을 가동하고 운영했던 수송부 근처라는 사실을 몰랐다.

유독성 폐기물은 물로만 퍼져나가지 않는다. 연구에 따르면 위험할 정도로 많은 양의 유독성 폐기물이 클락기지와 수빅기지의 물, 공기, 땅에 퍼져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사기지에 대한 추가 조사와 연구를 야기한 보고서는 미 정부 자신에 의해 공개되었다 1992년에 미 회계 감사원은 클락과 수빅의 오염된 지역에 대해 보고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필리핀에서 기지를 운영하면서 미국 환경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고서는 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미국의 슈퍼 펀드(공해방지 사업을 위한 대형사업)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 회계 감사원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기관에 의해 이뤄졌다:

1. 세계보건기구(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는 1993년에 기지 내 수질 오염을 밝혔다;
2. 필리핀 보건부는 1995년에 클락 지역 내 우물에서 가져온 물 샘플에서 기름기를 발견했다 ;
3. 캐나다 전염병학자인 로잘리 베르텔(Rosalie Bertell)은 1998년에 클락 지역 13개 공동체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신장 질환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
4. 1996년에 수빅만 관리청 사무소가 우드워드 클라이드에 권한을 위임했다;
5. 1997년, 클락 개발청이 웨스톤 인터내셔널에 클락 지역의 22개 오염 지역을 찾아낼 것을 위임했다;
6.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는 1999년부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7. 1999년에 이뤄진 필리핀 보건부의 또 다른 연구는 클락 지역의 오염된 지역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해당 연구는 클락지역 27개의 오염 지역과 수빅지역 19개 오염 지역을 찾아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는 해당 지역의 매립지에 유해 및 유독성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쓰레기들이 투기되어 있으며 산업 폐수, 처리되지 않은 하수, 오염된 배수 등이 정화되지 않은 채 수빅만으로 직접적으로 흘러갔다고 밝히고 있다. 필리핀 국내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 유류를 포함한 오염물질, 앨드린, 딜드린, DDT, 폴리염화비페닐과 같은 살충제, 납, 수은, 비소, 석면 등이 발견되었다.³⁾

또한 이 연구들은 미 해군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산업 유독 화학 물질들을 계속해서 버렸다고 주장하는 수빅에서 근무했던 미 해군 출신 재향군인의 이야기를 보도한 1992년 필리핀 탐사보도센터 보고서를 비롯해 이전 보고서에 신빙성을 더했다. 당시 그 재향군인은 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미국이 독성 물질과 폐기물들을 반복적으로 버리고 씻어냈는지에 대해 회상했다.

국제화학물질독성등록기구는 1985년-1986년에 수은이 뇌성마비, 정신지체, 자연유산, 신경 영향 등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미군기지정화위원회의 연구는

3) 전개서.

수은이 수빅만 침전물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벤젠, 톨루엔, 크실렌은 가솔린에서 모두 발견되는데 이는 특히 제트 연료유, 공업용제, 기름기 제거용매, 접착제, 폭발물, 아스팔트, 살충제, 염료, 페인트 제거용매, 차량 배출물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벤젠은 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 염색체 이상, 그리고 골수 퇴화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톨루엔은 신장과 간을 손상시키고 태아를 죽인다. 크실렌은 신장을 파괴하고 중앙 신경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다.

그린피스 독성감시단은 마발랏캇 지역에 있는 변압기가 폴리연합비페닐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리연합비페닐은 1987년부터 OECD 국가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2000년 2월, 이미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 변압기가 적합한 보호장치 없이 거주자들에 의해 버려지고 숨겨져 왔다고 보고되었다. 변압기에 사용된 폴리연합비페닐은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상관없이 모두 건강과 환경에 즉각적이고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출생 시 체중을 감소시키며 머리 둘레를 줄이고 조산을 불러일으키며 지적인 능력을 감소시키고 면역체계를 무너뜨리고 간 효소를 유발한다. 지속적으로 폴리연합비페닐에 노출되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고 동물실험 결과 종양을 양성하는 것으로 통해 인간에게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임을 알 수 있다.⁴⁾ 이것들은 과거 미군 기지의 몇몇 지역에서 발견된 유독 물질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12년 전, 클락과 수빅에 거주하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앙헬레스와 오롱가포 지방 법원에 미국과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분 원고들은 수빅만 강가 주변과 클락 내 재정착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필리핀 국내외 전문가들의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그들은 유독성 폐기물로 인해 그들에게 가해진 불행한 사건들에 대해 두 정부를 고소했다. 그 즈음해서 미군기지정화 위원회는 유독성 폐기물 피해자들과 관련한 272개의 사건들을 기록했다. 24명의 아이들이 신경질환, 심장질환, 백혈병, 다양한 종류의 암, 피부병, 신장 질환, 폐, 위, 호흡기 질환, 자연 유산, 사산 등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그들의 질병은 필리핀 종합병원을 비롯한 다른 정부보건기관에 의해 확인되었다.⁵⁾

피해자들이 기지 지역 정화를 요구하고 그들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보상을 요구

4) "US toxic wastes in the Philippines" at <http://yonip.com/toxicwaste/victims.html>

5) Virginia Guevarra, et al. vs. USA Department of Defense, et al." at <http://www.yonip.com/YONIP/Articles/Clark.html>

했으나 필리핀과 미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그들의 책임을 부정했다. 미국에 따르면 1947년 맺어진 군사기지협정에 따라 미국은 기지 지역을 건설 이전의 상태로 복구해야하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다. 미 회계감사원이 발견한 사항들은 새로운 협정을 거부하는 것과 연관시켜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여겨졌다.

나아가 두 정부는 유독성 폐기물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 심지어 필리핀에서 미국이 기지를 폐쇄한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이전 미군 기지를 정화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들과 그들의 친척들이 법원에 사건을 제소하도록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필리핀 정부에게 요구했다.⁶⁾ 1) 현재 존재하는 독성물질 오염의 규모, 정화 비용 등을 책정하는 연구 진행 2) 피해자들에게 의학 및 재정 지원 3)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기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고 오염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킬 것 4) 미국 정부의 오염에 대해 보상 의무를 강제할 것 5) 기지를 정화할 것. 수빅 지역의 원고들은 필리핀 정부가 그들에게 실질적 피해와 관련한 35만 페소,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125억 페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25억 페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클락지역 원고들은 실질적 피해와 관련해 252만 페소, 정신적 피해 관련 125억 페소,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25억 페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미국 정부가 기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정화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수빅지역 원고들은 실질적 피해에 대해 350만 달러, 정신적 피해에 대해 250억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는 250억 달러를 요구했다. 또한 클락 지역 원고들은 실질적 피해에 대해 252만 달러, 정신적 피해에 대해 250억 달러,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250억 달러를 요구했다.

2002년 8월 3일 콜린 파월(Collin Powell)이 필리핀을 방문한 것은 글로리아 아로요(Gloria Arroyo) 대통령이 군사기지 관련에 대한 화제를 꺼내고 그 지역 사람들의 고통을 보상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최고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가장 부주의하고 애매한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 글로벌 테러리즘과 아부 사야프(Abu Sayyaf), 미국으로의 필리핀 참치 수출, 필리핀 강제 추방자들에 대한 대우, 미국 정부가 발행한 필리

6) "Virginia Guevarra et al....." loc. cit., and "Wilfredo Mesiano, et al. vs. USA Department of Defense, et al." at <http://www.yonip.com/YONIP/Articles/Subic.htm>

핀 여행 관련 부정적 내용 삭제, 미국의 새천년사업수행위원회, 그리고 필리핀 정부가 조지 부시를 초청한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더 오랜 시간 논의되었다. 분명하게도 독성 폐기물 문제는 다른 이슈들과 합쳐져서 성급하게 그리고 되는대로 다루졌다. 그 중에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리스트에서 필리핀을 삭제할 가능성과 필리핀 내 아메리시안(미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 문제, 미 해군에서 필리핀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논의된 내용에는 공군, 독립발전사업자,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참전 용사들과 관련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⁷⁾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 전쟁 때 젊은 장교였던 콜린 파월 스스로도 수빅과 클락에 간 적이 있었다.⁸⁾

오늘날 피해자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죽음이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있다. 매일 피해자 가족들은 그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죽음 혹은/그리고 질병들에 대처해야 했다. 상황은 매일 더 절망적이며 이는 무기력함과 분노를 남긴다. 유독물질 오염 문제는 필리핀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미국이 이전에, 혹은 현재 군사 시설을 가지고 있는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우리는 괌, 한국, 오키나와, 일본, 푸에르토리코, 파나마 그리고 미국 내에도 환경적 부정의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가 정의를 위한 피해자들의 투쟁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빅에서 최근 열린 연대기념 모임에 우리는 일본에서 온 48명의 친구들을 맞이했다. 하루가 저물어가면서 상실, 수치심, 차별, 남용, 박탈, 부정의 등으로 인해 삶에서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를 대표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경험이었다.

- 에프렌 - 땅을 빼앗기고 숲으로부터 쫓겨나 그들의 삶이 영원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아에타 지역 출신 선주민
- 엘사 - 미군들의 휴가 기간 동안 그들에 의해 (성적으로) 학대받았던 자신과 자신 여동생의 경험에 의한 이야기를 나눔

7) "GMA-Powell discuss RP-US concerns", 3 August 2002, at <http://www.op.gov.ph/news.asp?newsid=1748>

8) "Powell vows enduring U.S. partnership, support to RP", 3 August 2002, at <http://www.op.gov.ph/news.asp?newsid=1747>

- 와인프레드 - 기지에서 일한 후 평생 동안 석면 침착증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발언
- 알피 - 예전 미군 기지에서 한국 선박 수선 회사인 한진에 고용되어 일했던 필리핀 노동자들의 새로운 세대가 겪고 있는 상황 공유
- 벨톤과 김슨 -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깊은 열망과 그들의 외모만 봐도 출신을 알 수 있어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차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나눔
- 마리테스 - 간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녀의 딸 조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특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딸이 기쁨의 원천이라고 이야기
- 알마 - 불의한 경험에 맞서 싸운 여성을 대표하며 엄청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았음. 알마는 군사 기지의 존재로 인해 영향을 받은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헌신적인 모습으로 2012 야오리 마츠이 상을 수여할 예정

기지 이후의 과제

미군 기지가 있을 때 증가했던 기지촌 성매매는 미군 기지가 철수하면서 감소했으나 성매매와 아동권의 침해는 근절되지 않았다. 이는 기지 관련 경제 활동을 포함한 필리핀 경제가 여전히 큰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65% 이상의 필리핀 사람들이 빈곤선 아래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1999년 방문군지위협정과 2001년의 상호군수지위협정에 서명한 이후 미국 군인들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와 가난한 필리핀 여성들과 아이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이용했다. 이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정치적 독립은 경제 주권에 의해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음을 가르쳐줬다.⁹⁾

이전에 기지로 사용되었던 땅을 농지 개혁과 아에타 사람들의 경우처럼 선조 토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농부와 선주민들의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

9) No Bases @20 Keynote Address November 8, 2012 Subic Free Port, Roland Simbulan
<http://www.nuclearfreebasesfreeph.org>

다. 이전 기지지역은 예상하다시피 정부의 농지 개혁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고 부유한 필리핀과 외국 투자자들만이 비옥한 기지 땅 개발에 투자할 수 있었다.¹⁰⁾

기지 폐쇄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20년 전, 미군 기지와 시설이 필리핀으로부터 철수됐을 때 몇몇 사람들은 필리핀 내 경제 위기와 안보 위험에 대한 공포를 예견했다. 나는 기지 관련 논란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니콜라스 플랫(Nicolas Platt) 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만약 미군 기지가 철수한다면 더 이상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기지지역이었던 곳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인한 것은 "평화 배당금"이었다. 한국 한진중공업도 전에는 군시설을 만들다가 센트럴 루존 지역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한 사업주 중 하나가 되었다. 오늘날, 필리핀 내 예전 미군기지 지역은 베트남 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미 공군과 해군이 고용했던 사람의 4배수에 해당하는 필리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170억에서 200억에 달하는 전체 수입을 가져왔다.¹¹⁾

기지를 변화시킨 우리의 경험은 실제로 엄청난 이야기이며 기지 철수 후에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지를 옹호하는 선전물들의 예언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군기지 철수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지난 20년간 필리핀을 방문한 오키나와 사람들, 일본인들, 한국인들을 비롯한 많은 다른 국가 사람들은 어떻게 필리핀 사람들이 미군 기지를 인계받았으며 이를 놀이공원, 리조트, 공항과 같은 상업용 공간, 민항 등으로 바꿨는지에 대해, 그리고 필리핀에서의 미군 활동이 극에 달했던 베트남 전쟁 때보다 어떻게 4배나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안보상의 문제에 있어서 서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를 해체한 필리핀은 사실 당시 냉전을 끝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군 기지는 사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남아있는 냉전의 흔적이었으며 미 국방부는 이를 한반도에 공격적인 무력 외교를 펼치기 위해 사용했다. 또한 베트남 군사개입을 위한 발사대로 사용되었으

10) No Bases @20 Keynote Address November 8, 2012 Subic Free Port, Roland Simbulan

11) No Bases @20 Keynote Address November 8, 2012 Subic Free Port, Roland Simbulan

며 이란이나 이라크와 같은 중동 국가들에 무력 외교를 펼치고 개입의 도약판으로 사용되었다.¹²⁾

우리가 기지를 없애기로 결정한 후 수반된 평화 배당금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웃 국가들과 더 안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으며 군사 개입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강대국들의 인질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기지가 일본 황실 군대의 첫 번째 타깃이었기 때문에 필리핀 땅에 공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군 기지가 없는 국가는 스스로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방을 현대화하고 국가 이익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자간 외교 주도권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작은 이웃나라 국가인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버마와 같은 주권 국가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며 무엇보다도 남사군도와 스카버러 솔을 침략하고 자국 영토라 우기는 중국과 같은 이웃 국가들에 대응할 때 필수적이다. 또한 방문군지위협정 아래 민다나오에 들어온 미 특수작전부대의 비밀작전에 의존하지 않고도 아부 사야프(Abu Sayaff)와 같은 위협을 평화롭게 다루고 국내 무력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¹³⁾

미-필리핀 불편한 관계

필리핀에서 미군기지 철수 20주년을 기념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불안해하기도 한다. 자랑스러운 이유는 20년 전, 우리는 우리를 식민지배한 후에도 신식민지 국가로 다뤘던 강대국에 맞서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불안한 이유는 방문군지위협정의 틀 아래 미국의 영향력이 다시 공격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결과물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자들이 수빅만에 있는 미군 기지에 유해한 폐기물들을 버린 것과 관련된 논란 때문에 우리의 20주년 기념행사가 무색해진 것은 씁쓸한 일이다.¹⁴⁾

12) No Bases @20 Keynote Address November 8, 2012 Subic Free Port, Roland Simbulan

13) 전개서.

14) No Bases @20 November 10, 2012 Gathering Reynote Address Rep. Walden Bello, Bantayog ng mga Bayani, Quezon City, <http://www.nuclearfreebasesfreeph.org>

수빅만 관리청 사무소는 지난 10월, 수빅만에 유해한 폐기물들을 버린 혐의로 미 해군 계약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수빅만 관리청 사무소의 기록에 따르면 MT 글랜 가디언(Glenn Guardian)의 대형 트럭이 폐기물을 버렸으며 이 폐기물은 최근 종료된 필리핀 내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한 미국 함정들로부터 수거된 것이었다. 이 대형 트럭은 필리핀 내 미국 선박들을 관리하는 말레이시아 회사인 글랜 해양안보 아시아 (Glenn Defense Marine Asia)에 소속된 것이었다. 수빅만에 유해한 폐기물을 버린 혐의는 자유 무역항 내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자아냈다.¹⁵⁾

수빅만 관리청 사무소에 의뢰에 따라 수빅 상하수도 정비업체 (Subic Water and Sewerage Co.)가 수행한 수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물의 독성이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섰고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 명시된 기준치도 초과했다. 수빅만 관리청 사무소장인 로베르토 가르시아(Roberto Garcia)는 해당 결과가 "글랜 해양안보 아시아가 폐기물 정화를 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가르시아는 또한 비록 글랜 가디언의 선장이 해당 폐기물들을 서필리핀해에 버렸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당 폐기물이 기름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먼저 정화했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¹⁶⁾

그렇다면 과연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했던 것인가. 10년도 더 이전부터 수빅만은 미 함정들이 휴식 및 휴가를 위해, 그리고 합동 군사훈련 장소로 선호하는 곳이었다.

필리핀에게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인 미-필리핀 관계는 필리핀 정부가 얼마나 불투명하게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는 미-필리핀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이 자주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회담에서 서필리핀해가 주된 이슈로 떠오른다. 우리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외에 어떤 내용이 회담에서 오갔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언론도 필리핀 언론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와 같은 언론들이고 이들은 최근 몇 달, 필리핀과 미국 공무원들이 필리핀에서의 미군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내용을 다뤘다. 아크바얀 지역 하원의원인 윌든 벨로가 이 기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외교부와 국방부를 채근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외무상이 "미국 부대 순환 배치가 증가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한다.¹⁷⁾

15) Philippine Daily Inquirer, Central Luzon Robert Gonzaga, November 9, 2012

16) Philippine Daily Inquirer, Central Luzon Robert Gonzaga, November 9, 2012

시민사회의 일원인 우리는 필리핀 의회에 있는 우리의 영웅들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미군 기지를 폐쇄함으로써 국가 주권을 쟁취한 우리의 성과가 필리핀과 미국 정부 사이의 투명하지 못한 이해관계로 인해 허비되거나 반복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¹⁸⁾

미국의 글로벌 지배와 공격적인 군사 태세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2012년 1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미 국방 전략 가이드에 포함되어있다. 해당 가이드는 21세기 미국의 개입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 국방부의 가장 큰 함대와 군사력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둘러싸고 중국의 주요 방어 센터들을 타깃으로 해서 재배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무기와 미군 기지에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과 관련해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 제국주의 결과와 영향, 그리고 그 특성을 드러내야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며 사회 변화를 위해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¹⁹⁾

미 국방부를 막기 위해, 오키나와, 일본 본토, 필리핀과 미국 사람들은 지속적이고 확대된 투쟁을 계속해 나가고 국제 연대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한 투쟁이 있어야 미국 정부는 그들이 걷은 세금을 기업 엘리트들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글로벌 군수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99% 미국인들의 삶을 증진시키도록 건강 보험과 교육, 주거에 사용할 것이다. 그러한 투쟁과 연대만이 미국의 개입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땅에 들어와 치욕적으로 계속 간섭하고 참을 수 없는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미군 기지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반드시 끝나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의 지속적인 연대와 헌신적인 노력만이 우리가 가슴 깊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 정의 그리고 안보를 불러올 것이다. ☯

17) No Bases @20 November 10, 2012 Gathering Reynote Address Rep. Walden Bello, Bantayog ng mga Bayani, Quezon City <http://www.nuclearfreebasesfreeph.org>

18) No Bases @20 November 10, 2012 Gathering Reynote Address Rep. Walden Bello, Bantayog ng mga Bayani, Quezon City, <http://www.nuclearfreebasesfreeph.org>

19) No Bases @20 Keynote Address November 8, 2012 Subic Free Port, Roland Simbulan <http://www.nuclearfreebasesfreeph.org>

Philippines No Bases @20 : Reflections, Challenges and Tasks

Corazon FABROS, Stop the War Coalition

This year, November 24, 2012 to be exact,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historic pullout and closure of all U.S. bases in the Philippines, a year after the Senate rejected the new bases treat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1945 Philippine-U.S. Military Bases Agreement. A part of our history that makes us feel very proud for indeed it was a historical feat and achievement. It marked the shutting down and dismantling of the largest U.S. overseas naval and air force bases that were located on Philippine soil since 1901.

When the Philippine Senate rejected the proposed new bases treaty on Sept. 16, 1991, the U.S. was, the strongest economic and military superpower in the world. Filipino patriots consider that day as historically significant because it marked the end of 470 years of foreign military bases and foreign troops presence on Philippine soil, which began during the Spanish colonization and extended almost permanently during the American colonial period and beyond Philippine independence in 1946. It was a proud moment for the Philippines that many people in Okinawa, in Japan, South Korea, Australia, New Zealand, Guam, in some parts of Europe and in many places where there are still foreign military bases and foreign troops, want

to draw lessons from and make it their template for eventual success in their struggles.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Importance of the Closure of U.S. Bases

The original U.S. bases were established during the Philippine-American War when the first U.S. visiting forces invaded and occupied our country barely a year after our successful independence struggle against the former colonizer Spain. For almost a century the United States bases in the Philippines have been the hub of American Military operations in Asia and the Pacific, serving as storage, fueling, maintenance, training and communications stations.

Before 1992, the United States occupied and maintained seven military facilities in the Philippines of which Clark Air base and Subic Naval Base are considered the largest and the most strategic in terms of function and geographical location.

Name of the Base	Location	Total Area	Function
1. John Hay Air Station	Baguio City, Benguet	695 Hectares	Communications, Training, Rest & Recreation
2. Camp Wallace Air Station	San Fernando, La Union	202 Hectares	Training, Communications
3. US Naval Radio Station	Capas, Tarlac	356 Hectares	Communications, Training
4. San Miguel Naval Communications Stations	San Antonio, Zambales	1,112 Hectares	Communications
5.O'Donnel Transmitter Station	Capas. tarlac	1,756 Hectares	Communications, Training
6. Subic Naval Base	Subic Bay	6,658 Hectares	Weapons Depot, Training, Communications, SRF, Navy
7. Clark Air Base	Pampanga	4,440 Hectares	Weapons Depot, Training, Communications, Airforce

Spread across the provinces of Pampanga and Tarlac, Clark Air Base is a land-trapped area about the size of Singapore. It is reputed to be the largest US military installation in Asia. Clark had the capacity to store petroleum, oil and lubricants of 25 million gallons and a 200,000 square meter storage for ammunition for the US Air Force.¹⁾

Subic Bay is a deep-water harbor, formed by volcanic activity. Developed as a naval station in 1884 by the Spaniards, it was eventually taken over by the Americans in 1904 and made it into a naval reservation where a modern ship repair facility was developed in 1906. At the height of its operation by US Navy, it was the largest naval supply depot in the world, handling 1 million barrels of fuel each month. The US armed forces prided itself as the biggest fuel depot ever that can supply even for a hundred wars. It also served as a major ship repair facility for all US combat ships in the Asian region.²⁾

With the Philippine Senate's rejection of a new bases treaty, the US armed forces pulled out of the two bases in 1992 coinciding with the eruption of Mt. Pinatubo. In the aftermath of the Mt. Pinatubo eruption, some residents of Pampanga were given temporary shelters at a 12-hectare site at the Clark Air Base Communications Center or CABCOM. From 1991 to 1999, an estimated 20,000 families were resettled temporarily in CABCOM. The families stayed there for three to five years before they were relocated in different resettlement areas provided by the government.

Many say that it was the eruption of Mt. Pinatubo that closed the bases. What has been the role of the volcanic eruption in the outcome of the issue of the bases? Believe it or not, as if it was a god-sent act, after 600 years as a dormant volcano, Mt. Pinatubo erupted on June 12, 1991, the very day of the celebration of Philippine Independence in our revolution

1) Virginia Guevarra, et al. vs. USA Department of Defense, et al.” at <http://www.yonip.com/YONIP/Articles/Clark.html>

2) Ibid.

against Spain. In reality, the Pinatubo factor made it more difficult for the anti-bases senators to argue against the immediate bases closure. It reduced the number of anti-bases Senators from 19 to 12 Senators because of the perceived hardships and dislocations in Central Luzon brought about by Pinatubo eruption, though 12 Senators was still a safe number to reject the proposed new bases treaty. The twelve senators who stood their position up to the voting day are now known as the “Magnificent Twelve”. A replica of their handprints is now the main feature of a memorial in their honor in front of the main building of what is now the office of the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The Legacy of the Former Bases

After the pullout of American personnel from the military bases in Subic Bay, it was noticed that there was high incidence of rare ailments among communities in and around rivers and tributaries into and out of the naval base. Meanwhile, at CABCOM, the settlers noted this odd taste and oily sheen in their drinking water. People got sick and this was where People’s Task Force for Bases Clean Up (then a program under the Nuclear Free Philippines Coalition) began its work of closely monitoring health cases. When high incidence of documented cases became apparent, environmental as well as health research, calling on toxicologists, epidemiologists, and other organizations to provide the needed expertise was imperative in its lobby and information work to call for US responsibility.

Like all human beings, the residents of these communities needed water. The river tributaries of Subic Bay provided the people with a place to bathe, swim, and play in, a source of livelihood, and groundwater. In CABCOM, 203 shallow pump wells were installed as source of water for the settlers. The settlers did not know they were located on what used to be a motor pool, a place where the Americans’ engines were serviced and

maintained.

The toxic wastes did not strike through water alone. According to studies, water, air and soil-borne toxic materials were present in dangerous amounts at both Clark and Subic bases. Ironically, the report that triggered further investigation and studies on the former military bases was revealed by the US government itself. In 1992, the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reported contaminated sites in Clark and Subic. The report revealed that US did not comply with its own environmental laws in the operation of the bases in the Philippines. It likewise acknowledged that the cost of the cleanup could approach Superfund proportions. Following the GAO report were studies done by:

- 1.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which identified water pollutants present in the bases in 1993;*
- 2. The Philippine Department of Health (DOH) in 1995, which found oil and grease in water samples taken from wells in Clark;*
- 3. Canadian epidemiologist Rosalie Bertell, which in 1998 noted “startlingly high” levels of kidney diseases in 13 communities around Clark;*
- 4. Woodward-Clyde in 1996, which was commissioned by the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 5. Weston International, commissioned by the Clark Development Authority, which identified 22 contaminated sites in Clark in 1997;*
- 6. The Philippine Commission on Human Rights, which in 1999 started supporting the victims.*
- 7. Another DOH study in 1999 to determine the extent of health impact of toxic contamination in Clark alone.*

The studies identified 27 contaminated sites at Clark and 19 at Subic. The WHO Mission Report, particularly, said that landfills on site were used for dumping all kinds of waste, including toxic and hazardous waste materials; and that industrial waste waters, untreated sewage and polluted storm water drains were all directly discharged to Subic Bay, mostly without treatment. They revealed that heavy metals and contaminants ranging from oil and petroleum lubricants, pesticides such as aldrin, dieldrin and DDT to PCBs, lead, mercury, arsenic, asbestos and others were found in various levels exceeding Philippine National Standards.³⁾

The studies gave credence to earlier reports, including that of the Philippines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in 1992, which featured a US Navy veteran from Subic who claimed that the Navy incessantly produced industrial toxic chemicals and discarded them without regard. He recalled how the US routinely flushed and left behind a trail of waste and toxic materials in the process of ship repair (Admiral Eugene Carroll, Jr. US Navy ret.).

The 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 1985-1986, states that mercury has been known to cause birth defects such as several cerebral palsy, mental retardation, spontaneous abortion, neurological effects, among others. A People's Task Force for Bases Clean-up study, reveals that mercury was detected in some of the sediments of Subic Bay. Benzene, toluene, and xylene are all found in gasoline especially jet fuel, industrial solvents, degreasers, adhesives, explosives, asphalt, pesticides, dyes, paint remover, and vehicle emissions. Benzene causes leukemia, aplastic anemia, chromosomal aberrations and bone marrow defects. Toluene damages the kidney and liver and destroys the fetus. Xylene destroys the kidney and causes central nervous system disorder.

Greenpeace Toxics Patrol also documented the existence of a transformer in Mabalacat containing PCB, which had been internationally banned for any

3) Ibid.

new use by OECD countries in 1987. In February 2000, it was reported that the transformer, which had already contaminated surrounding soil, was disassembled and drained by residents without appropriate protective gear. PCB (polychlorinated biphenyl), used in power transformers, has immediate and long-term effects on health and environment in both small and high concentrations. It interferes with reproduction, decreased birth weight, reduced head circumference, and premature birth, decreased intellectual performance, suppresses the immune system and induces liver enzymes. Chronic exposure causes skin disorders, promotes tumors in experimental animals and may be carcinogenic in humans.⁴⁾ These are just few of the toxic materials found in harmful amounts in several sites at the former US Bases.

Twelve years ago, hundreds of residents of Clark and Subic simultaneously filed a suit against the US and Philippine governments before the Angeles and Olongapo City regional trial courts. Most of the plaintiffs lived in areas beside the rivers of Subic Bay and the resettlement area in Clark. Backed by scientific studies of both international and local experts, they charged the two governments for the misery wrought upon them by toxic wastes. Around that time, the People's Task Force for Bases Cleanup had documented 272 cases of toxic waste victims. Twenty-four children were suffering from neurological disorders; heart ailments, leukemia, various types of cancer, skin disorders, kidney problems, lung, stomach or respiratory problems, spontaneous abortions, still-births. Their medical condition was certified by medical practitioners from the Philippine General Hospital and other government health institutions and agencies.⁵⁾

When the victims demanded for the cleanup of the former bases and the compensation for their deaths and illnesses, both the US and the Philippine

4) "US toxic wastes in the Philippines" at <http://yonip.com/toxicwaste/victims.html>

5) Virginia Guevarra, et al. vs. USA Department of Defense, et al." at <http://www.yonip.com/YONIP/Articles/Clark.html>

governments refused and denied their liability. According to the US, the 1947 Military Bases Agreement frees them from any legal obligation to restore the bases into their former conditions. The findings made by the US GAO were considered moot with the rejection of a new treaty.

Furthermore, there had been no assistance to the toxic waste victims (in whatever form) from both governments. Worse, ten years after the pull out of the US from their bases in the Philippines, there is no concrete move to clean up the former US bases. This fact has compelled the victims and their relatives to file a case in court.

The cases⁶⁾ demand that the Philippine government 1) conduct a study to determine the present extent of toxic contamination, the cost of arresting and cleaning it; 2) render medical and financial aid to the victims; 3) declare the bases as not suitable for human habitation and evacuate people staying on the contaminated sites; 4) compel the US government to make reparation for the contamination; 5) clean up the bases. The plaintiffs from Subic demand that the Philippine government pay them a total of P3.5 million in actual damages, P12.5 billion in moral damages, and P12.5 billion in exemplary damages, the Clark plaintiffs demand P25.2 million in actual damages, P12.5 billion in moral damages, and 12.5 billion in exemplary damages.

The plaintiffs demand that the US government conduct a comprehensive cleanup of the bases and surrounding areas as well. The plaintiffs from Subic, also demand \$3.5 million in actual damages, \$25 billion in moral damages, and \$25 billion in exemplary damages; and the plaintiffs from Clark also demand \$25.2 million in actual damages, \$25 billion in moral damages, and \$25 billion in exemplary damages.

Collin Powell's visit to the Philippines on August 3, 2002 was an opportunity for then Pres. Gloria Arroyo to take up military bases issue and

6) "Virginia Guevarra et al....." loc. cit., and "Wilfredo Mesiano, et al. vs. USA Department of Defense, et al." at <http://www.yonip.com/YONIP/Articles/Subic.htm>

reconsider at the level of top management their political stand within the purview of compensating human sufferings in the area. However, it can be described as having been at best lackadaisical and noncommittal. The reports indicated that the issue of global terrorism and Abu Sayyaf, Philippine tuna export to the US, treatment of Filipino deportees, lifting of negative US travel advisory on the Philippines, the US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and Malacanang's invitation for George Bush to visit were dealt more at length. Apparently, the toxic waste issue was lumped with other concerns in hasty and haphazard review. Among them are the possible delisting of the Philippines from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the anti-money laundering list, the Amerasians issue in the country and the possible recruitment of Filipinos in the US Navy. Also included are issues on air services and independent power producers (IPP) and the World War II veteran benefits.⁷⁾ Ironically, as a young captain during the Vietnam War, Powell had himself been in Subic and Clark.⁸⁾

Today, the victims' situation is critical. Death stares them in the eye. Everyday, the families deal with disease and/or death in their midst. The situation is getting to be desperate everyday and it leaves one with a feeling of helplessness and anger. This problem of toxic contamination is not only apparent in the Philippines. It is as well a problem in other parts of the world where the United States used to have or presently have their military facilities. We are also aware of victims of environmental injustice in Guam, Korea, Okinawa, Japan, Puerto Rico, Panama and in the United States itself. Your support and solidarity will go a long way in advancing their struggle for justice.

During our commemorative solidarity gathering in Subic recently, we were honored to have been joined by 48 friends from all over Japan. Towards

7) "GMA-Powell discuss RP-US concerns", 3 August 2002, at <http://www.op.gov.ph/news.asp?newsid=1748>

8) "Powell vows enduring U.S. partnership, support to RP", 3 August 2002, at <http://www.op.gov.ph/news.asp?newsid=1747>

the end of the day, representatives of the different sectors who have seen and lived the pain of loss, shame, discrimination, abuse, deprivation, injustice spoke one after another. It was a humbling experience to listen to their stories:

- Efren- an indigenous person from the Aeta community who spoke of his ancestors whose lands were taken away and lives were forever altered as they were driven away into the forest;
- Elsa, who spoke about her own experience and her sisters' shame of being abused in the hands of U.S. troops during rest and recreation;
- Winefred who spoke on behalf of former workers inside the base who now have to deal with asbestosi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 Alfie who shared the situation of a new generation of Filipino workers in the former base under a Korean ship repair company, Hanjin;
- Belton and Gibson who shared their deepest longing to be recognized and to loved by their a father they never had a chance to meet and their fears and pain of being discriminated for apparently their physical appearance reveal so much of their origins;
- Marites who lovingly told us about Joy, her epileptic daughter, who despite her continuing burden of special care remains hopeful and considers her daughter a source of their joy;
- Alma, who represents women who rose from these experiences of injustice, continue to be engaged and courageous despite the seeming insurmountable challenges. Alma will be conferred the 2012 Yayori Matsui Award for her lifelong dedicated work and advocacy for women and children whose lives are affected by the presence of military bases and troops.

Post Bases Challenges

While the level of military prostitution enhanced by the former U.S. bases presence has been reduced after the removal of the U.S. bases, prostitution and violation of children's rights has not really been eradicated since the national economy to which the bases economy has been integrated, continues to be characterized by the unequal distribution of wealth where more than 65% of Filipinos live below the poverty line. With the signing of the 1999 Visiting Forces Agreement and the 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 in 2001, units of U.S. military personnel are back to exploit and to take advantage of the poverty of Filipina women and children. Which gives us the lesson that political independence has to be sustained and consolidated by economic sovereignty.⁹⁾

Farmers and indigenous peoples are still disallowed from their claims for inclusion of the former base lands in agrarian reform, and in the ancestral domain as in the case of the Aeta people. The former bases have been blatantly excluded from the government's agrarian reform program, allowing only the rich local and foreign investors to pour in money to develop the fertile base lands. Landless Filipino farmers continue to be denied the use of the former baselands for agriculture, thus preventing the bases' transformation from "weapons" use into "ploughshares."¹⁰⁾

There is Life After the Bases

When the U.S. military bases and facilities were pulled out from the Philippines 20 years ago, some people predicted economic ruin and doom

9) No Bases @20 Keynote Address November 8, 2012 Subic Free Port, Roland Simbulan

<http://www.nuclearfreebasesfreeph.org>

10) Ibid.

for the country and security fears for the nation. I even remember the threat of then U.S. Ambassador Nicolas Platt, when he said at the height of the bases' debates that, "foreign investments would dry up and the economy would collapse if the U.S. bases pull out." Instead, the former U.S. base lands today have become linchpins of economic growth in the country. This is the "peace dividend" that has lured businesses to set up shop in the former bases, including the South Korean Hanjin Heavy Industries, which has made the former U.S. military facilities into one of the fastest-growing employers in the Central Luzon region. Today, the former U.S. military bases in the country are reported to employ almost more than four times the number of Filipino workers that the U.S. Navy and U.S. Air Force employed at their Vietnam War peak, and has brought in more than P17-20 billion into the revenues into the national treasury.¹¹⁾

Our post bases conversion experience is indeed a great story and all the doomsday scenarios that the pro-bases propaganda said would happen if the bases were pulled out, were all proven wrong and false. There is life after the U.S. bases. Many Okinawan, Japanese and Korean peoples as well as other visitors from other countries who have visited the Philippines during the past 20 years now admire how the Filipino people have taken over the U.S. bases and have converted these into recreational parks, resorts, commercial uses such as airports, and civilian harbors and have created for the nation more than four times the number of employed compared to the peak of U.S. military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during the Vietnam War.¹²⁾

As for the security issues, the Philippine dismantling of the U.S. military bases in this part of the Western Pacific was actually our contribution to the ending of the Cold War in our part of the world. For the U.S. bases were in fact the most visible vestiges of the Cold War in the Asia Pacific,

11) Ibid.

12) Ibid.

used by the Pentagon for its aggressive gunboat diplomacy in the Korean peninsula, as launching pads for military intervention in Vietnam, and as springboards for intervention and gunboat diplomacy against countries like Iran, Iraq and other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The "peace dividend" that accompanied this decision was that after we removed the bases here, we could now secure better relations with ALL our neighbors and not be held hostage by being host to a superpower that dragged us into its military interventions and possibly, made us a magnet for attacks as during World War II, when the U.S. bases here were the first targets of attack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But the country without the U.S. bases must also be able to develop its external defense capability both in terms of modernizing its national defense forces and multilateral diplomatic initiatives to defend national interests and sovereignty. This is to deserve its truly sovereign status like our smaller neighbors like Singapore, Brunei, Vietnam and Burma, especially in dealing with claimants and intruders to the Spratlys and Scarborough Shoal such as neighboring China. It must also learn to deal on its own with its internal armed conflicts and peace and order threats such as the Abu Sayaff, without relying on the almost-permanently-based covert operatives of the U.S. Special Operations Forces which we have invited in Mindanao under the cover of the Visiting Forces Agreement.¹³⁾

Disturbing Trends in US-Philippine Relations

As we commemorat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closure of U.S. military bases in the Philippines, we have reason to be proud and alarmed. Proud because 20 years ago, we as a people asserted our sovereignty over our territory against the wishes of a superpower that had treated our country

¹³⁾ Ibid.

first as a colony, then as a neocolonial entity. Alarmed because the gains of that historic act are being undermined by the aggressive reassertion of American power under the framework of the Visiting Forces Agreement. It certainly leaves a bitter taste in the mouth that our marking of this occasion is overshadowed by the controversy over the dumping of hazardous waste of US military forces in Subic Bay by a Pentagon contractor.¹⁴⁾

The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SBMA) is investigating a US Navy contractor for allegedly dumping hazardous wastes on Subic Bay last October. SBMA records showed that wastes dumped by the tanker MT Glenn Guardian were collected from American ships that joined the recently concluded joint military exercises in the country. The tanker is one of the vessels owned by Glenn Defense Marine Asia, a Malaysian company operating in several countries which services American ships in the Philippines.

The allegations of waste dumping in Subic Bay have alarmed locators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n the free port.¹⁵⁾

Test results of the water samples conducted by Subic Water and Sewerage Co. the firm contracted by the SBMA to test water samples taken from the vessels, showed that the level of toxicity of the liquid wastes exceeded the norm and went beyond levels set by international marine pollution conventions. SBMA Chairman Roberto Garcia said the results “confirmed that [Glenn Defense Marine Asia] did not treat the waste, which it should have.” Garcia added that although the Glenn Guardian captain claimed that the wastes were dumped in the West Philippine Sea, “they should have treated these first because that contained oily waste.”¹⁶⁾

14) No Bases @20 November 10, 2012 Gathering Reynote Address Rep. Walden Bello, Bantayog ng mga Bayani, Quezon City <http://www.nuclearfreebasesfreeph.org>

15) Philippine Daily Inquirer, Central Luzon Robert Gonzaga, November 9, 2012

16) Ibid.

One wonders how many times this incident happened in the past. For over a period of more than ten years now, Subic has been a preferred place for U.S. ships visits for rest and recreation and joint military exercises.

US-Philippine relations—our most important bilateral relationship—provides an example of the lack of transparency that marks the way the Philippine government is conducting foreign policy. We hear that high-level negotiations have been frequently taking place to strengthen the US-Philippine military alliance, with a particular emphasis in the West Philippine Sea. We barely know the content of these discussions except what is reported in newspapers. Not in our newspapers but in the Washington Post and the New York Times, which, in recent months, have been the ones that have broken the news that Filipino and US officials have negotiated an expansion of 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country. Only after the office of Akbayan Representative Walden Bello badgered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for information following these news reports did they get an acknowledgement from the Secretary of Foreign Affairs that there would be “increased US troop rotations.”¹⁷⁾

We continue as members of the civil society, to work closely with our champions in Philippine Congress to press for mor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from our government in these important matters involving our national security. We cannot allow the gains we made in advancing our national sovereignty by kicking out the US bases to be squandered or reversed by non-transparent understandings between our government a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e cannot compromise our national sovereignty.¹⁸⁾

17) No Bases @20 November 10, 2012 Gathering Reynote Address Rep. Walden Bello, Bantayog ng mga Bayani, Quezon City <http://www.nuclearfreebasesfreeph.org>

18) No Bases @20 November 10, 2012 Gathering Reynote Address Rep. Walden Bello, Bantayog ng mga Bayani, Quezon City <http://www.nuclearfreebasesfreeph.org>

The re-conditioning of U.S. global dominance and the aggressive military posture is outlined in the new U.S. Defense Strategic Guidance released in January 2012 by the Pentagon, which outlines the U.S. interventionist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 It puts emphasis on the deployment of the Pentagon's largest armada and military power in the Asia-Pacific region, ostensibly to encircle China and target its principal defense centers. It is in this situation and context that in our struggle against U.S. bases and nuclear weapons in the Asia-Pacific, we should expose the present character, impact and consequences of U.S. imperialism in the Asia Pacific region. Doing so would contribute to the awakening, to raise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and contribute in no small way to organizing them for social change.

To curb the Pentagon, the people of Okinawa, mainland Japan, the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will have to wage a constant and ever-growing struggle and foster international solidarity. Only after such struggle will the U.S. government spend taxpayers' money on health care, education, and housing and improve the lives of the 99% of the American people - rather than on a big global military machine, to guard the global interests of the corporate elite. Only after such struggle and solidarity will we be free of the U.S. military presence that continues to visit unbearable disruption, a persistent intrusion, and the indignity of the involvement of our homelands in preparations for U.S. interventionist war.

This must end. And only our continuing solidarity and committed work will make our deepest longing for genuine peace, justice and security will be attained. ☺

대결과 억지에서 평화와 협력으로 :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세 가지 시민행동 제안

이태호 / 참여연대

들어가며

존 레논의 노래 중에 Imagine이라는 유명한 노래 외에 Give Peace A Chance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가 적용되어야 할 가장 절박한 시공간 속에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놓여 있다.

내년(2013년)으로 정전 60주년을 맞는 분단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군사적 긴장은 최근 수년간 극도로 악화되어 왔다. 2010년 말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은 그 정점이었다.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기보다 갈등과 분쟁의 길로 가고 있다. 갈수록 확대되는 남북 격차는 문제해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한 통치자들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반면, 한미 양국의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보다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일 지역군사동맹을 가시화하는 구실로 작용함으로써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화를 촉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2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 재난은 전세계에서 핵발전소가 가장 집중적으로 몰려있고 핵무기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한 이 지역이 지닌 잠재적 위험을 새롭게 환기시켰다. 하지만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상식적인 시민들의 노력에 비해 핵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조치들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6자회담은 4년째 중단된 상태이고, 북한의 핵무장을 포함하여 핵억지력에 대한 역내 각국의 의존도는 도리어 심화되었다. 최악의 핵 재난인 후쿠시마 사건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을 확대하거나 핵재처리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들은 역시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유지되는 경제적인 활력과 잠재력으로 인해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자원과 공간을 독점하기 위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래된 영토갈등과 역사논쟁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서로를 배제하는 역제의 논리는 결국 한반도와 동아시아 주민들의 안전하고 조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역설을 낳고 있다. 과장된 공포에 기반한 경쟁적인 군사화,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가 야기하는 역설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함께 번영하는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채택되어 왔지만 문제해결에 실패해 온 군사적 억지전략들에 의존해서는 가능할 것 같지 않다. 평화와 협력에 기회를 주어보면 어떨까? 이제는 보다 담대하게 실패한 전제와 처방에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 이하에서는 한국 평화운동의 입장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를 보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의 새로운 세기를 보다 평화롭게 하는데 기여하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세 가지 행동의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1. 2013년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는 한반도 주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주민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동북아 전체의 군사갈등과 대결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2010년 일어난 의문의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에서의 남북 교전 이래 심화된 남북의 군사적 갈등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냉전해체 이후 한반도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은 점점 더 심화되어 왔다. 국제적인 고립이 심화되며 체제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대응책으

로 들고 나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남한 정부는 힘의 우위를 앞세워 북한을 굴복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강제하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이래 남북이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거부하고, 북한의 붕괴가능성에 주목한 대북 압박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5.24조치를 발표하여 개성에서의 제한된 교역을 제외한 모든 남북 민간경제협력을 봉쇄하고, NLL인근의 도서지역을 요새화하며, 한미연합군의 대북 무력시위를 강화하는 등 매우 강경한 포괄적인 대북봉쇄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불안정성 혹은 붕괴 가능성 같은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북한 당국의 주장을 외면하거나, 심지어 북한 당국과의 기존합의마저도 부인하는 태도를 지속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안 2에서 이동)대북 압박 봉쇄정책과 무력시위는 도리어 북한의 군사주의에 변명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남북 사이의 적대감과 군사적 갈등은 커지고 남북간의 사회적 경제적 협력의 기회만 사라졌다.

지금 남한에서는 대결적 태도와 우월감을 가지고 북을 봉쇄하고 압박해서 지난 5년간 이룬 것이 무엇인지 재검토 해보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증진 등의 현안과 더 붙어 오는 12월 대선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서울에서 각계각층인사 490명이 "2012년의 선택, 평화! - 정전 59주년에 즈음한 7.27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한국의 평화단체들이 조직한 것이다. 이 선언에서 참가자들은 "이제 정치 군사적인 적대행위와 군비 경쟁을 평화적 협력으로 대체하고,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소모되는 사회적 에너지와 비용을 경제회생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돌려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이제 6.15선언 이후 지난 10년간 제대로 실험해보지 못하고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한반도 평화협력 작업에 진지하게 제대로 투자하자. △2013년 정전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전환의 해,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만들자.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5.24대북 봉쇄조치를 철회하고 6.15선언과 10.4선언에서 합의한 신뢰구축 방안과 교류협력 계획을 복원하자. △서로를 군사적으로 자

극하는 행위를 줄이는데 남한이 보다 성숙하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이자. 특히 공격적인 한미군사훈련이나 무력시위를 자제하자"고 제안했다.

2013년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캠페인은 한국의 평화단체들과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 2013년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세계 평화운동이 함께 연대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제안 2. 북핵 폐기를 넘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로

한반도 핵 위기는 동북아시아의 핵 위기이다.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은 지난 2009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은 애초 핵을 폐기할 생각이 없었고, 향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하지만,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건 아니건 간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을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불가피하다.

6자회담에서 6자가 이미 합의한 행동계획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실천 의지를 발휘하는 것에 새로운 접근의 단초가 있을 수 있다.

우선, 6자회담 재개와 더불어 북한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평화체제' 의제를 보다 성의 있게 검토하는 것에 돌파구가 있을 수 있다. 2005년 9월 19일 채택된 6자 공동성명에 따르면, 6자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위한 별도의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했고, 특히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신 핵억지력과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다. 한미양국은 최근 수년간 '확장억제위원회'를 설치하여 북한 핵 및 미사일 방어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증진하는 등 기존의 핵우산 정책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북한 점령을 가정한 군사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공격적인 대북군사정책을 공공연히 발전시켜오고 있다.

재래식 전력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닌 미국과 한국이 핵우산도 강화하면서, 북

한의 핵폐기만 주장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핵 억지에 의존하는 전략을 폐기할 준비가 되지 않은 나라는 북한만이 아니다. 북한보다 더 우월한 군사력을 갖춘 한미일을 포함한 주변국 모두다.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정책은 또 다른 핵위협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이런 일방주의적 접근방식의 한계는 북한의 두 번의 핵 실험과 6자회담의 교착에서 이미 검증되었다. 북한의 군사주의를 자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북핵 폐기를 위한 협력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가 그것이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는 남과 북 그리고 일본이 핵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미러중 등 주변국이 핵무기를 통한 비핵국가 공격과 핵보유국간의 핵무기 선제사용을 배제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고 동북아에서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다.

남한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정부와 시민들이 먼저 의심과 공포를 넘어 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월한 재래식 전력을 갖춘 나라들이 그 같은 결정을 보다 수월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불신과 공포 혹은 북한붕괴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가 한미일 국가와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북한 위협에 대한 과장과 과도한 군비지출, 핵억지력에 대한 의존과 이중적 핵정책을 정당화해왔다. 이제 발상을 전환하여 다가오는 2015년의 NPT 평가회의에서 동북아비핵지대화를 공식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구체적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운동을 본격화해야 한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먼 곳으로부터의 핵무기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핵발전소가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고 있다. 더불어 썩은 에너지로 알려졌던 핵발전의 잠재적 비용에 대해서도 재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후쿠시마 사건을 계기로 탈핵운동이 대중적 수준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낡은 원전들의 잇단 가동중단 사태로 인해 시민들이 위협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다. 40년 수명을 다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는 제2도시인 부산의 신시가지로부터 3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점에서 지난 3월 한국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가 핵물질의 안보에 대해 논의

하면서, 핵 없는 세상, 탈핵에너지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문제는 핵 안보가 아니라 핵으로부터의 안전, 시민의 안전이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역내 국가들은 후쿠시마 재난 이후에도 핵발전 건설 계획을 강행하거나 핵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외부로부터의 핵무기의 공격에 대비해 핵억지력을 배가하는 것은 핵 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기보다는 핵무장 경쟁을 부추겨 왔다. 반면, 이웃에 위치한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이웃에 존재하는 핵발전소의 개수를 줄이는 일은 결과적으로 인류를 핵위협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핵군축운동과 탈핵운동은 긴밀히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이 결합은 더욱 중요하다.

제안 3. 동아시아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동아시아에서는 탈냉전 이후 경제, 문화, 사회적 영역에서 교류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이와 함께 영토갈등 등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과 안보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센카쿠(일본지명)/다이오우위(대만지명)/다이오우타이(중국지명)의 영유권,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남사군도(Spratly Islands)의 영유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약간 성격을 달리하지만, 한반도의 NLL을 둘러싼 갈등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는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으로의 복귀’를 추진하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2012년 초에 발표된 미국의 신전략지침(2012)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지정학적 우선순위를 중동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할 것”과 “전체 전력은 축소하되, 안정화 작전 임무에 비해 비대칭전력에 의해 미국의 접근과 작전의 자유가 도전받는 지역에 전력을 투사하는 임무를 더 강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 In Brief: Assessing DOD's New Strategic Guidance, CRS Report for Congress. 2012, 1. 16

2012, 6월 2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아·태 지역의 미 해군 전함을 현재 전체의 50%에서 2020년까지 60%로 확대하고, 전체 항공모함 11척 중 6척을 아시아 태평양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보다 앞서 2011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 의회 연설에서 군비는 축소하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는 절대로 삭감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군사비 삭감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과의 군비 경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성장하는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결해야 하는 부담과 비용을 동맹국과 협력국들에게 분담하게 하면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군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핵심 논리는 “영토 및 해양 분쟁에서부터 항행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들, 그리고 자연재해 피해복구에 이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의 전통적 동맹국들에서의 기지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동남아시아부터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에서 미군주둔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12년 전후 호주로부터 북서부 기지에 미해병대 주둔약속을 받아낸 데 이어, 필리핀 수빅만 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에 대한 접근권을 다시 확보했다. 말라카 해협에 자리잡은 싱가포르에도 군함을 파견했다. 미국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도 미 해군함정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이러한 작용은 중국과 이들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미국주도의 해양군사동맹이 동아시아 해역에서 제해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그 대상으로 지목된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미국의 협력대상 국가들마저도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구상에 가장 빠르게 호응하는 나라는 역시 한국과 일본이다. 클린턴 국무장관²⁾ 스스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난 경제성장과 향후의 번영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50,000명 이상의 병력을 포함한 미군이 보장해온 안보와 안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일한, 미일호주, 미일인도 등 세 개의 삼각군사동맹을 형성하려 하고 있고, 이 중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형성은 가장 중요한 축에 해당한다.

2)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미 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수년간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군수협력과 미사일 방어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에드워드 라이스(Edward Rice) 주일미군사령관은 2009년 7월 동경에서 열린 한미일 차관보급 회의에서 “정보 공유가 미-일, 미-한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MD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한편, 한미전략동맹 강화를 천명한 이명박 정부는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와 아덴만의 CTF(Combined Task Force) 등 미국이 이끄는 ‘국제해양협력(Global Maritime Partnership)’에 적극 동참해 왔다. 동시에 한일간의 군사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바라는 오바마 미 행정부에 협력해왔다.

한일 군사협력은 역사적으로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대량살상무기 차단, 해양안보, 그리고 기타 역내 급변사태 대비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2년 6월 14일 열린 제2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양자는 1)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방안 마련과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 강화에 합의했고, 2) 이례적으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일 3자 협력의 범위를 재난구호에서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2 회의의 결과는 신속히 나타났다. 먼저 이 회담 직후인 6월 26일 이명박 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하지만 협정의 최종 비준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론과 여야정치권의 반대에 직면하여 연기되고 말았다. 한편, 6월 21일 역사상 최초로 한미일 군사훈련이 서해상과 제주 남방해역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미 핵항공모함도 참여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 훈련이 수색, 구조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일 훈련 내용에는 해상차단작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 군사훈련을 계기로 제주도에 건설되고 있는 해군기지의 지정학적 의미가 더욱 분명해졌다. 제주해군기지에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전후하여 미군뿐만 아니라 자위대 함정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제도화 추세로 볼 때, 제주해군기지는 형식상 한국해군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와 괌과 더불어 한미일 해상군사협력을 위한 거점이자 한미일 공동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의 바다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동아시아의 바다는 새로운 협력과 번영의 공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냉전 시대보다 더 군사화된 새로운 분쟁의 공간이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다. 영토갈등이나 해양에서의 안전한 통항 문제를 군사동맹과 무력시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영토주권이나 영유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여 군사적 억지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 게다가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은 대개 멀지 않은 과거의 역사적 비극들과 잇닿아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중국이나 북한이 야기하는 위협을 과장하여 한미일 군사동맹 같은 미국 주도의 대중국 해양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도리어 경쟁적인 군사화를 촉진함으로써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도리어 소모적인 대결상황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어렵지만 선택가능한 해결책은 동아시아 바다의 군사화를 막고, 오래된 갈등과 분쟁의 전선을 호혜와 협력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자면 상호이해에 기반하여 역내의 영토/자원 분쟁과 정치경제적 갈등을 호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동아시아 공동안보협력체제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자와 시민단체, 기업 등의 다각적인 대화, 교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호혜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한일 군사협력과 한미일 군사훈련이 한국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무렵인 7월 초 일본은 최근 동중국해 인근의 센카쿠(일본지명)/다이오우위(대만지명)/다이오우타이(중국지명) 영유권을 두고 중국/대만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동중국해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2012년 7월 7-8일간 GPPAC 동북아시아 운영위원회 회의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다. 여기에는 베이징, 상하이, 홍콩, 타이완, 동경, 교토, 서울, 평양, 울란바토르 등으로부터 20여명이 참석했다. 7월 6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해양대학과 GPPAC이 주최하고 홋카이도 대학과 러시아 퍼그워시 위원회가 후원한 학술토론회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토분쟁에 대한 민간대화"가 개최되었다. 이 두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영토분쟁을 포함한 정치적 긴장상태가 동북아시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평화적 해결 노력, △무장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긴장고조의 예방, △지역의 협력적 노력을 통한 긴장완화,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이해와 교류의 중요성 등의 원칙을 재확인했

다. 특히 참석자들은 민족주의나 정부의 입장을 뛰어넘어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보교류와 포지션페이퍼의 공동 작성 등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훈련, 특히 갈등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공동입장을 확인했다.

이 점에서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는--지금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으로 인해 빛이 바랜--구상을 한국과 세계 시민사회의 평화운동이 되살린다면, 동아시아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데 중대한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④

별첨자료 1. 2012년의 선택, 평화! - 정전 59주년에 즈음한 7.27 평화선언

헤아릴 수 없는 인명과 재산 피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흔을 남긴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 체결로 정지된 지 59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반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로 또다시 많은 이들이 죽고 다쳤으며 물질적 정신적 손실 또한 막대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한반도와 주변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이 정전협정 이래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평화와 협력의 길을 찾기보다 갈등과 분쟁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다시 군사주의와 냉전적 편가르기의 대리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세기 초 한반도가 꾸었던 화해와 협력의 꿈은 정전 이래 가장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상황 속에서 질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희망 대신 새로운 군비경쟁과 갈등의 악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전 59년, 분단된 우리사회의 실정을 돌아보면,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경제위기가 깊어지고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민중의 삶이 총체적 도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민생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국가안보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만합니다.

이제 정치군사적인 적대행위와 군비 경쟁을 평화적 협력으로 대체하고,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소모되는 사회적 에너지와 비용을 경제회생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돌려야 합니다. 군비를 줄여서 복지에 써야 합니다. 국가가 외부 위협을 핑계로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소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협력으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남과 북, 그리고 동북아시아 주변국과의 평화와 협력은 세계가 처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경제회생의 돌파구며 생존전략입니다.

북한과의 화해 협력이 소용없다거나 북한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더러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위기에 빠진 북한 정권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개선하고 고쳐야 할 냉전 분단의 잔재들도 산적합니다. 그러나 대결적 태도와 우월감을 가지고 북을 봉쇄하고 압박해서 지난 5년간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적대감과 군사적 갈등은 커지고 협력의 기회만

사라졌습니다. 한반도는 더 불안해졌고, 도리어 봉쇄된 북한의 주민들과 더불어 봉쇄의 주체인 우리 자신까지, 양측이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동북아 전체의 군사갈등과 대결을 촉진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전체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6.15선언 이후 지난 10년간 제대로 실험해보지 못하고 유아무야되고 말았던 한반도 평화협력 작업에 진지하게 제대로 투자해야 합니다. 2012년 대선을 통해, 그리고 2013년 정전 60년을 맞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낡은 냉전의 시대, 무한갈등과 군사대결의 시대로 뒷걸음치는 상황을 절대로 그대로 놔두서는 안 됩니다.

2013년 정전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전환의 해,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늦어도 2013년 7월 27일까지 60년 정전상황을 종식시킬 항구적 평화방안 마련을 위한 남과 북, 그리고 관련국들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차기 정부 임기 안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5.24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합니다. 6.15선언, 10.4선언에서 합의한 신뢰구축 방안과 교류협력 계획을 복원하고 더욱 발전시켜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촉진해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와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고, 6자회담 합의대로 핵문제 해법과 동시에 동북아시아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결은 대결을 부릅니다. 서로를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를 줄이는데 남한이 보다 성숙하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공격적인 군사훈련이나 무력시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한일군사협력이나 한미일 군사협력 같은, 냉전시대에조차 상상하기 힘들었던 역내 편가르기를 국민 합의 없이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평화와 협력은 대결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생존전략이며 동북아시아 시대의 여명을 열어갈 수단입니다. 이제 안으로는 민주화된 복지국가, 밖으로는 평화협력의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갈등과 분쟁의 진원지가 아니라 남과 북은 물론, 동북아 모든 나라가 공존하고 상생할 비전을 주도하는 평화협력의 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2012년 대선을 계기로 정파를 초월해 이 새로운 국가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
합시다. 민주주의, 복지와 더불어 평화의 길을 선택합시다.

2012. 7. 26.

2012년의 선택, 평화! - 정전 59주년에 즈음한 7.27 평화선언 참가자 일동

별첨자료 2. 제주 해군기지 반대 국제행동주간 평화선언

동아시아의 바다를 평화와 협력의 바다로 만들자!

제주도를 전쟁의 섬이 아닌 세계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

우리는 오늘 서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 강정마을에 주민의사에 반하는 거대한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왜 평화와 번영의 이름으로 전쟁과 파괴가 반복되는지 진지하게 되묻고자 한다.

지난 20세기는 전쟁과 군사화의 세기였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일어났고 냉전의 시대가 뒤를 이었다. 냉전시대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이 연이어 일어났다. 그 갈등의 유산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전 세계 곳곳을 분쟁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

제주도와 한반도가 포함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역시 지구상에서 가장 격렬한 전쟁의 하나였다. 제주도는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섬 전체가 일제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동원되었고, 한반도와 전 세계에 냉전체제가 형성되는 격변기에 제주도 내에서 최소한 주민 3만명 이상이 학살되는 4.3사건(1948)의 비극을 겪었다.

냉전이 끝나고 21세기가 시작될 때, 인류는 새로운 세기가 평화와 협력의 세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시민들은 이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과장된 공포에서 벗어나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폭력에 눈을 돌려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원했다. 또한 전 세계의 정부들이 총을 내리고 지구 문명 전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했다. 그리하여 지구촌에서 주민들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삶에 우선순위를 두는 새로운 민주적 체제들이 조화롭게 발전하기를 꿈꿨다. 분단 한반도에 속한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만들자는 구상이 제안된 것도 이 즈음이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새로운 세기는 또 다른 전쟁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정의는 회복되지 않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전쟁과 파괴, 고삐 풀린 탐욕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 결과 세계경제가 큰 위기를 맞았다. 그것은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재앙이었다. 그 대가는 고

스란히 99%의 민중들이 고통스럽게 지불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동아시아에서 낡은 군사주의가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더욱 주목받게 된 이 지역의 경제적 활력과 잠재력에 비례하여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치가 더욱 가속화되어 온 것이다. 최근 수년간 동아시아에서는 20세기 전쟁의 유산인 영토 및 영유권 분쟁과 군사주의가 극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59년째 비정상적인 정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분단 한반도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 냉전의 유산인 군사동맹과 군사훈련도 해양안보의 이름으로 한층 공격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반면,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핑계로 동아시아의 군사화가 촉진되는 동안, 정작 지난 한 세대에 걸쳐 이 지역 국가들에서 극단적으로 심화되어온 경제적 양극화, 사회안전망과 공동체의 붕괴, 그리고 가속화되는 환경파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협력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왜 대다수 인류가 원하지 않는 낡은 갈등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인가? 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실패한 방법이 반성 없이 적용되는 것일까? 왜 여전히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주민들을 쫓아내고, 주민 삶의 터전인 환경을 파괴하며, 도리어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빼앗거나 뺏기지 않고, 점령하거나 축출당하지 않고, 공동의 터전인 지구환경과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모두가 평화롭게 협력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태평양(the Pacific)은 평화로운 바다(peaceful ocean)라는 뜻이다. 아시아를 찾아 항해한 어느 유럽인에 의해 그렇게 명명되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거대한 바다가 평화로운 바다라는 새 이름을 얻은 이래 태평양에 갇들어 사는 주민들의 삶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바다, 서태평양은 이 지역 모든 주민 공동의 터전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교역과 교류의 공간이다. 어떤 이유로도 쟁탈과 패권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아시아의 바다에 회귀해야 할 것은 낡은 군사주의가 아니다.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협력이다. 태평양은 전쟁과 파괴의 바다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바다, 생명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

지금 여기 서태평양의 작은 섬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만들자는--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위기에 처한--꿈을 실천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다. 동아시아

패권경쟁의 전초기지가 될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여 지난 6년간 평화적인 저항을 지속해온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이 그들이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인접한 강정마을은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답고 오래된 마을의 하나이다. 현무암 토양의 제주도에서 흔치 않은 두 개의 큰 개천을 통해 사철 맑은 물이 강정마을 앞바다로 흘러든다. 이로 인해 강정마을은 청동기시대 이래 제주도 주거 및 농경문화의 중심이었다. 강정마을과 그 앞바다는 연산호, 맹꽁이, 남방돌고래 등 수십 종에 이르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의 터전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민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공동체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그들의 동의 없이 강행되는 전쟁기지 건설에 맞서왔다.

전쟁과 갈등에 연루되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의 염원이자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천부의 인권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right to peace), 그들의 삶의 터전인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공존할 권리(right to environment)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그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역시 반드시 수호되어야 한다.

제주도민들에겐 지난 세기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에 반대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또한 제주도민들은 스스로를 위해 동아시아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만 할 절박한 이해관계와 소명을 가지고 있다. 세계의 시민들은 그들의 절박한 염원과 소명에 참여하고 연대함으로써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 협력과 공존의 새 시대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이에 강정마을 구름비 바위 주변에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차단벽이 설치된 지 1주년인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1주일간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국제공동행동 주간으로 정하고 세계 시민들의 평화의지를 모아 이렇게 선언한다.

-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주민들의 평화권, 환경권,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제주도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강정주민들의 발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강정마을은 생명평화의 마을로, 제주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켜져야 한다.

- 해양의 군사화에 반대한다. 동아시아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

2012. 9. 2.

<제안자>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From Confrontation and Deterrence to Peace and Cooperation : 3 Point-Plan to Give Peace a Chance in East Asia

Taeho LEE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Introduction

You might know 'Imagine', the famous song of John Lennon. There is another song by him, "Give Peace A Chance". I'd like to emphasize that "Give peace a chan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is crucial at this moment.

The year 2013 marks the 60th year of ceasefire in the Korean Peninsula. Hatred and military tension in the country has seriously deteriorated in the last few years. It reached its peak when the Yeonpyeong artillery exchanges occurred at the end of 2010.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South Korea have intensified the conflict and disputes rather than enhanced 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outh Korea unnecessarily provoked North Korean leaders while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both South Korean and American policy makers have taken a more aggressive and authoritative attitude. The unstable ceasefir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being used to justify

not only military alliance among Korea-US-Japan which leads to militarization in East Asia but also strengthened Chinese armed forces.

In February 2011,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illustrated the potential dangerous situation in East Asia's where nuclear power plants are crowded and nuclear arms races are increasing. While people are putting more efforts to make the world a nuclear free place, governments in the region are still consolidating their reliance on the nuclear deterrence. The Six-party Talks has been suspended for 4 years, and the level of reliance on nuclear disaster including North Korea's attempt to arm itself with nuclear weapons has become higher. The Governments' plans for expanding nuclear power plants and developing nuclear reprocessing technologies are continuing despite the Fukushima catastrophe.

Proposal1. End the Korean War in 2013! From the Armistice System to a Peace System

The unstable armistice situation has forced not only Koreans but also the people in East Asia to endure sufferings and sacrifices. The tensions and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driven the entire East Asia region towards military conflicts and confrontation. For example, the Cheonan warship incident and the artillery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ve accelerated militarization of the region.

Despit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stable armistic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worsened. North Korea has developed nuclear weapons in response to its isol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egime instability. Recen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policies to make North Korea give in and enforce its changes by using South Korean's superior power rather than seeking fundamental resolution for such situatio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tally ignored the June 15 Declaration and the October 4 Declaration that North and South Korea summit agreed. Instead, it has only paid attention to the possible contingency and taken a hard line on North Korea. Particularly, after the Cheonan Warship incident, the Lee administration has developed stronger and comprehensive containment policies such as disconnecting most of civil economic cooperation, militarizing islands of the Yellow Sea, and strengthening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US against North Korea.

However, it is unlikely that the existing problems will be solved by ignoring North Korea's arguments or denying agreements made with North Korea based on the subjective judgment of its instability or possible contingency. Such oppressive containment policies against North Korea provided justification for North Korea's militarization which increased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Hostility and military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ve intensified while opportunities for socio-economic cooperation have deteriorated.

In South Korea, criticism is on the rise on what the government has achieved in the last five years by enforcing a coercive containment policy and maintaining a confrontational attitude against North Korea. Demands for strengthening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welfare system, easing tensions and building a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re becoming critical issues for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On 26 July 2012, 490 prominent people with various backgrounds announced "the 7.27 Peace Declaration on the 59th year of the armistice agreement - Peace, the Choice of 2012". It was organized by South Korean peace organizations including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nd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They declared that "It's time to replace political, military confrontation and arms races with peaceful cooperation. It's time to allocate social resources on economic rehabilitation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Endorsers of the Peace Declaration demanded to "△make efforts towards peace cooperation, which has never been seriously implemented for the past 10 years since the June 15 Declaration was made. △make the year 2013, the 60th year of the armistice agreement, as a turning point for making a peace system. △lift the May 24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of which we are suffering together. △restore the June 15 Declaration and October 4 Declaration and implement the agreed confidence building and cooperation measures. △be determined and active to reduce military provocations against each other, particularly offensive joint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and armed protests."

A campaign to "Put an end to the Korean War in 2013" has already been initiated by peace activists and some politicians in South Korea. We also ask peace activists around the World to stand with us in solidarity to make 2013 a turning point for a peace agreement.

Proposal2. Toward the Nuclear Free Northeast Asia beyond the abolition of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means a nuclear crisis in Northeast Asia. The Six Party Talks, which was formed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suspended since 2009. Recently, the phrase "nuclear-have" was added i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Skeptical views were also raised that North Korea had never intended to discard nuclear power, and will not in the future. However, it does not matter whether South Korea and neighbouring countries recognise North Korea as a nuclear-have. A new approach should be taken to make North Korea enter into negotiations in order to resolve nuclear threats from North Korea.

More active and preemptive will to take action would provide a chance to

find the new approach. Seriously considering a peace regime agenda which North Korea has been strongly demanding in addition to reopen the Six Party Talk would be a breakthrough. On 19 September 2005, the six parties agreed on the Initial Ac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which "each party will take in the initial phase to achieve early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stablishment of Working Group on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It also states that "the directly related parties will negotiate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n appropriate separate forum."

However, South Korea, Japan and the US are increasing their reliance on nuclear deterrence and the missile defense system rather than actively participating in a discussion to build a peace system. South Korea and the US have developed the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EDPC) against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strengthened the nuclear umbrella policy. They have also developed offensive military policies against North Korea such as joint military operation plans to occupy North Korea at a contingent situation in North Korea.

The US and South Korea are strengthening the nuclear umbrella with their absolute superiority in conventional arms and strategies. In this context, insisting on the abolition of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s unlikely to resolve the situation. South Korea, the US, Japan and other neighbouring countries as well as North Korea are not ready to abandon their nuclear deterrence policy. A nuclear deterrence policy results in another nuclear threat. The ineffectiveness of such unilateral measurement has been revealed in many cases such as nuclear tests conducted by North Korea and deadlock situations of the Six Party Talks. It is time to take another stance unless South Korea intentionally wants to provoke North Korea's militarism.

Not only efforts to abolis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but also efforts to remove nuclear threats in Northeast Asia are required. Establishing a nuclear free Northeast Asia is possible only when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the US, China and Russia assure negative security assurance and no first use policy, instead of giving up nuclear weapons by North and South Korea, and Japan. This is a new and feasible approach to make North Korea give up nuclear development and make Northeast Asia free from nuclear threats.

South Korea, Japan and the US should take preemptive actions to overcome suspicion and fear. It is less difficult for them to make such preemptive peace actions because of their superior conventional weapons and strategies. Disbelief and fear of North Korea, or an expectation for contingency have justified excessive military spending, dependency on the nuclear deterrence policy and double standard nuclear policies. Now it is time to make the Nuclear Free Northeast Asia as an official agenda at the coming 2015 NPT Review conference and launch a campaign with concrete action plans for that.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revealed that nuclear power plants which are located close to us could be a greater threat than nuclear weapons. Furthermore,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evaluate the potential costs of nuclear energy which are regarded as "cheap". In South Korea, the public has started to change their stance on nuclear power plants after the Fukushima catastrophe, especially since several old nuclear power plants stopped the operation because of breakdowns. The Gori 1 nuclear power plant is merely 30km far away from Busan downtown, the 2nd largest city in South Korea.

In this regard, it is very disappointing that the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in 2012 did not discuss on how to make the world nuclear free or using alternative energy sources instead of nuclear energy while dealing with the security of fissile materials. The key point is the security from nuclear and people's safety, not the security of nuclear power. It is also disappointing to notice that countries in the region including South Korea, the US, Japan and China are pushing new projects for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or expanding nuclear technology exchanges.

History says that strengthening nuclear deterrence against nuclear attacks instigates nuclear arms races rather than removing nuclear threats. Raising a question on "the peaceful use of nuclear" and reducing the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in neighbouring countries would save the world from nuclear threats. The nuclear disarmament movement and anti-nuclear power plant movement should go together, and this is especially crucial for East Asia.

Proposal 3. Bring peace and cooperation to East Asia Sea

After the post-Cold War era,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exchange has rapidly increased in East Asia. At the same time, military tension and the security dilemma has intensified in the region due to territorial disputes. Most of all, tensions between China and Japan on the Senkaku Islands (by Japan)/the Diaoyu Island (by Taiwan)/ the Tiaoyutai Islands (by China), tensions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Vietnam or the Philippines on the Spratly Islands, tensions between Korea and Japan on Dokdo Island have continued to increase. Even though it has different nature to some extent, tensions on the Northern Limit Line (NLL) are grave as well.

Unfortunately, there is not any institutional mechanism to control and/or resolve such conflicts and tensions in East Asia. Situation becomes more complicated with China's economic and military rise and the US's 'pivot to Asia' foreign policy to China in check.

The 202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s New Strategy Guidance which was published in early 2012 can be summarized into two main points: 1) a shift in geographical priorities toward the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hile retaining emphasis on the Middle East 2) a shift in the

balance of missions toward more emphasis on projecting power in areas in which U.S. access and freedom to operate are challenged by asymmetric means ("anti-access") and less emphasis on stabilization operations, while retaining a full-spectrum force.

On 2 June 2012, Leon Panetta, the US Secretary of Defense, stated that "by 2020 the Navy will reposture its forces from today's roughly 50/50 percent split between the Pacific and the Atlantic to about a 60/40 split between those oceans. That will include six aircraft carriers in this region, a majority of our cruisers, destroyers, Littoral Combat Ships, and submarines", during the keynote speech delivered at the Asia Security Summit (Shangri-La Dialogue) which was held in Singapore. Earlier on November 2011, US President Barack Obama declared "As a result, reductions in US defence spending will not - I repeat, will not - come at the expense of the Asia Pacific" during his speech to Australian Parliament.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US to continue the arms race with China as it faces military budget cuts due to its financial crisis. Accordingly, the US tries to maintain its influence in the East Asia region by requesting its allies and partners to share costs and burdens to counter China's growing military power. The US Government's main argument is "the challenges of today's rapidly changing region-from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s to new threats to freedom of navigation to the heightened impact of natural disasters-require that the United States pursue a more geographically distributed, operationally resilient, and politically sustainable force posture." And overcome these challenges, the US is "modernizing our basing arrangements with traditional allies in Northeast Asia -- and our commitment on this is rock solid - while enhancing our presence in Southeast Asia and into the Indian Ocean."

In fact, the US marines will station in Australian's Northeast base around 2012, and the US also regained access to Subic Bay Naval Base and Clark Air Base in the Philippines. The US also dispatched a warship to Singapore

which is located in the Strait of Malacca. Also, it is known that the US puts efforts to gain access for US naval ship to Asian countries including Vietnam, India, Indonesia, and Malaysia. Such efforts by the US exacerb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countries. Not only China but also allies of the US such as India, Indonesia and Malaysia have responded negatively towards the fact that US-led alliance navy gains power in East Asia.

South Korea and Japan quickly and positively responded to the US plan. Hillary Clinton, the US Secretary of State stated that “Asia’s remarkable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decade and its potential for continued growth in the future depend on the security and stability that has long been guaranteed by the U.S. military, including more than 50,000 American servicemen and servicewomen serving in Japan and South Korea.” The US tries to establish three trilateral military alliances in the Asia-Pacific region, namely US-Japan-ROK, US-Japan-Australia, and US-Japan-India. Among these, establishing the US-Japan-ROK military alliance plays the most crucial role.

In the last few years, the US Pacific Command has emphasized that it is crucial to establish US-Japan-ROK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nd among all, logistics cooperation and missile defence cooperation are the most important. At the US-Japan-ROK Vice Minister meeting which was held on July 2009, Edward Rice, Commander US Forces Japan, complained that Missiles Defence is not carried out properly since information is shared exclusively only between US-Japan and US-ROK.

Meanwhile,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hich declared strengthening the US-ROK strategic alliance has actively cooperated and engaged with the US global maritime partnership including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nd combined task force in the Gulf of Aden. At the same time, the Lee administration has cooperated with the Obama administration who wishes to establish US-Japan-ROK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by accelerating the ROK-Japan military cooperation.

Despite the unpleasant history between two countries, the ROK-Japan Military cooperation is processed for the reason of defending themselves against threats by North Korea's nuclear/missiles, block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aritime security, and other contingencies in North Korea. At the 2nd US-ROK Ministerial Dialogue 2+2 Meetings which was held on 14 June 2012, both parties 1) agreed on exploring ways to strengthen comprehensive and combined defence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2) affirmed the importance of trilateral security collaboration with Japan. The scope of US-ROK-Japan trilateral cooperation will include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maritime security, freedom of navigation and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result of 2+2 Meeting came quickly. On 26 June 2012, right after the 2+2 meeting, the Lee administration opened a special cabinet meeting and passed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The ratification of the said agreement was postponed due to strong opposition of the public opinion and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 21 June 2012, US-Japan-ROK trilateral naval exercises were conducted at the Yellow Sea and South Sea of Jeju Island for the first time. The US nuclear aircraft carrier also participated in the trilateral naval exercises. The South Korea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explained that trilateral naval exercises are for 'humanitarian aid' purposes such as searching and rescuing. However, the naval exercises also included 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s. According to the news release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the US-ROK-Japan trilateral naval exercises "will focus on improving interoperability and communications with the ROK Navy and the Japan Maritime Self Defense Force'.

From this trilateral naval exercise, the geopolitical meaning of naval base which is constructed in Jeju Island became more evident. It is possible that not only US navy but also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will enter the

Jeju naval base during the US-ROK-Japan trilateral naval exercises. Even though the Jeju naval base is formally South Korean naval base,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ill be used as a joint outpost to counter China and a base for the US-ROK-Japan trilateral naval exercises, together with bases in Okinawa and Guam.

East Asia marine is now facing a crucial turning point. It can be a new space of cooperation and prosperity or of conflicts with reinforced militarisation. It is not advisable to use armed forces and strengthen military alliances to resolve territorial disputes or guarantee safe navigation. It is not realistic at all to mobilise military means by emphasising territorial sovereignty.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are closely related to recent historical tragedies in the region. Reinforcing the US-led marine military alliance to counter China by exaggerating threats caused by China or North Korea will accelerate militarisation in the region. This will prevent peaceful solution and deteriorate a situation by provoking unnecessary confrontations.

A possible solution is to stop maritime militarisation in East Asia and to transfer conflicts and confrontation into cooperation and reciprocity. To achieve this,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East Asia common security cooperation system to resolve territorial and resource dispute, and political-economic conflicts in the region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expand cooperation, dialogues and communications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cademic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orporations to enhance understanding for peaceful solutions. ☺

Appendix 1. The Choice of 2012, Peace!

- The 27 July Peace Declaration on the 59th year of the armistice agreement

It has been already passed 59 years since 27 July 1953 when the Korean War was ceased after leaving numberless deaths and inestimable property damages. Since then, the war was not officially terminated for more than half century i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mistrust and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any people were killed and wounded while material and psychological damage was also huge.

Most of all,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has reached its peak in the last few years. Rather than seeking peace and cooperation, North and South Korea are heading towards further conflict and dispute. The Korean Peninsula is becoming a battlefield where militarism and separation under the cliché cold war ideology. Dream to reconcile and cooperate is being vanished under the extreme military conflict. Instead of having a hope to make peacefully co-existing Northeast Asia, a nightmare of arms races and conflicts is emerging.

Divided Korean society under the 59 years of ceasefire is gloomy and bleak. As financial crisis and socio-economic inequalities have become worse, most people, except few privileged groups, are living in misery. Under this circumstance, establishing a social safety net and social welfare system is the most crucial and urgent matter to be solved for national security.

Now, we must replace political, military hostilities and arms races to peaceful cooperation. We must use our resources, which has been consumed under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to recover from financial crisis, restore economic democracy and secure a social safety net. We must cut military spending and use the money for social welfare. The State should not be negligent towards people's safety and survival under

unjustifiable reason for threats from outside. Cooperating North and South Korea will regenerate economic development. Establishing peace and cooperation among North and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s a way to solve financial crisis and survival strategy.

Still, there are concerns tha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will not work out or North Korea will never change its position. Some people believe that there is no need to have a serious conversation with North Korean government that is not able to extricate from difficulties. There are also many leftover problems from the cold war era that should be solved.

However, what have we achieved in the last five years by containing and pressing North Korea with a confrontational position and act as if we are superior to North Korea? Hostility and military tensions have grown while opportunities to cooperate have vanished. The Korean Peninsula has become more unstable. Both North Korea that has been contained and South Korea that has taken a containment policy are suffering. Moreover, conflicts in the Korean Peninsula promote military tension in Northeast Asia, which will result negative impacts to the future of the region.

Now, we should seriously reconsider the Korean Peninsula peace cooperation project which has not been attempted in the last 10 years since the June 15 Mutual Declaration between two Korea. By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while commemorating 60 years of the ceasefire in 2013, we should open an era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We should not let the situation regress back to the old Cold War era, unlimited conflicts and military confrontation.

Let's make the Year 2013, the 60th year of ceasefire, a year to walk towards peace system. By the latest 27 July 2013, North and South Korea, and other related states should start discussion on ending the war and establish a permanent peace system. Therefore,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reement should be realised and implemented during the next

administration.

The May 24 sanction should be lifted and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restarted. Peace unification should be promoted by restoring confidence-building and cooperation plan as stipulated in the June 15 Mutual Declaration between two Korea and the October 4 Declaration on the Advancement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 Peace and Prosperity.

Nuclear weapon and military threats should be removed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o establish peace. The Six-party talk should reopen immediately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lay a leading role in resolving nuclear problems and establishing peace system in Northeast Asia as agreed at the Six-party talk.

Confrontation will bring another confront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a more mature and active position to refrain from provocation and conducting aggressive military drills. Dividing countries in the region by conducting Korea-Japan military cooperation or Korea-US-Japan military cooperation, which were not tried even in the Cold War era, should not be made without having full consent from its people.

We appeal to people. Peace and cooperation is a surviving strategy and a way to open new Northeast Asia era by resolving vicious circle of conflict. We should move towards a democratic social welfare state and peace cooperation system. The Korean Peninsula is no more the area of conflict and dispute, but the area of peace cooperation where all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North and South Korea, take lead on realising a vision of co-existence.

By using the opportunity of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let's discuss and agree on this new state vision. Let's choose the way to peace in addition to democracy and social welfare.

26 July 2012

The Choice of 2012 - Peace

*Participants to the 27 July Peace Declaration on the 59th year of the
armistice*

Appendix 2. Asia-Pacific Peace Declaration for No Naval Base in Jeju Island

- Bring peace and cooperation to East Asia!
- Don't militarize Jeju Island and the Pacific!
- Make Jeju an Island of World Peace!

While witnessing the construction of a gigantic naval base in beautiful Gangjeong village in Jeju Island, located in the Western Pacific Ocean, we cannot help but raise questions again: why war and destructions are repeated under the name of peace and prosperity?

The 20th century was the century of war and militarization!

Two World Wars broke out followed by the Cold War. Even during the Cold War era, big and small wars continued. The legacies of conflicts stay until today and turn various parts of world into powder kegs.

The Asia-Pacific region, where the Korean peninsula is located, was one of the most intensive battlefields in the world. During the 2nd World War (the Pacific War), the whole Jeju Island was used as an outpost to stage war in China. And during the era of turmoil caused by the Cold War, the Island experienced 3 April Massacre in 1948 that resulted in more than 30,000 civilians' death by their own Government.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nd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whole humankind sincerely hoped for a new era, an era of peace and cooperation. People wanted to bring justice not only by getting away from an exaggerated fear from outside, but also resolving conflicts and violence inside the community. Also, people expected all governments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solve problems the world faces rather than pointing

guns at each other. In this way, we all dreamt of harmoniously developing a democratic system where people's happiness, safety and sustainable lives are top priorities. Around this time, the idea of making Jeju Island an Island of Peace was also raised. Jeju Island which belongs to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is a world natural heritage site.

Unfortunately, the new millennium started with another war. Justice has not been delivered and democracy has been set back. In the last 10 years, war, destruction and greed have swept the whole world, unregulated and uncontrolled. As a result, the world economic crisis has emerged. This disaster was caused by neo-liberalism and militarism being not put under democratic controls. 99% of people had to pay for the price in pain and agony.

Militarism is rising again in East Asia despite lessons from the past!

Arms race and military confrontation have accelerated in parallel with East Asia's potential and economic vitality despite global economic crises. In the last few years in East Asia, militarism and conflicts regarding sovereignty and territory have been dramatically rising. In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59th year of the Armistice Agreement continues without ending the Korean War, military tension has been rising sharply. Military alliance and military drills which are legacies of the Cold War have intensified with more aggressive gestures under the name of maritime security.

While militarization of East Asia is further intensified under the excuse of military threats from outside, national and regional cooperation to solve problems such as damaged environment, polarized economy, and broken social security and community is developing only too slowly.

Why does the history of conflict repeat even if most people do not wish for it? Why do solutions that have proven to be failing and making everyone unhappy continue to be used? Why do things such as evicting

people, destroying their environment and threatening their safety under the name of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security continue? Is it really impossible to make the world into a place where everyone can peacefully cooperate and co-exist without being stolen or stealing and without being occupied or occupying?

The Pacific must be the sea of peace and lives, not the sea of war and destruction!

The Pacific Ocean means peaceful ocean. It was named by a European who sailed the ocean in search of Asia. However, when we look back on the history, since the Ocean was named as the Pacific, lives of the people who lived in the ocean have never been peaceful.

Now, we must change this. The sea of East Asia, the Western Pacific Ocean, is a common livelihood of all people who are living here and the biggest platform of trade and exchange worldwide. It should never be a place of conflict, struggle, and dispute. What we have to bring to the sea of East Asia is not militarism but a cooperation that makes everyone happy.

People have gathered here to realize the dream – though now endangered by the construction of a naval base – to make an Island in East Asia the Island of World Peace.

There are Jeju people including villagers of Gangjeong who have continued a non-violent and peaceful resistant for the last 6 years against the construction of a naval base which will militarize the sea of East Asia.

Gangjeong village is a buffer zone of the UNESCO Biosphere Reserve and one of the oldest and the most beautiful villages in Jeju Island. Clean water from two big streams falls into the front sea of Gangjeong village all year round. These two streams are rarely found in Jeju Island because the Island is made of a volcanic rock called basalt. Thanks to this, Gangjeong village

has been the centre of agriculture and residence in Jeju Island since the Bronze Age. Gangjeong village and its front sea is also a livelihood of many endangered species including soft coral, narrow-mouthed toad and the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s. At this place, to save their own community and environment, villagers have peacefully protested against navy base construction, which has been enforced without their consent.

Living peacefully without being caught up in war and conflict is individual and collective right that everyone is naturally entitled to. Gangjeong villagers' human right to peace and human right to environment must be protected and promoted. Their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freedom of association must be guaranteed at all times.

Jeju people have a full right to stand against a repeat of the last century's tragedy. Also, they present a strong call to open a new era of peace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for themselves and for all of us.

People of the world can move one step closer to a peaceful world and the new era of coexistence by standing in solidarity with Jeju people's struggle

We, together with the wish of the peoples of the world for world peace, strongly urge the followings:

- Stop Jeju naval base construction immediately!
- Guarantee human right to peace, human right to environment and freedom of expression of Gangjeong villagers!
- Guarantee Gangjeong villagers' right to speak during the World Conservation Conference which will be held in Jeju!
- Allow Gangjeong village to remain a community of life and peace, and keep Jeju Island as the Island of World Peace!
- No militarization of the sea! Make the sea of East Asia the sea of

Peace!

- No to arms race in the Asia Pacific! Yes to peace in the Asia Pacific!
- Give peace a chance.

2 September 2012

Proposed by:

Gangjeong Village Association

*Jeju Pan-Island Committee for Stop of Military Base and for Realization of
Peace Island*

*National Network of Korean Civil Society for Opposing to the Naval Base in
Jeju Island*

발표자 약력

조셉 거슨(Joseph Gerson, 미국)

▪ 현직

-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 평화경제안보프로그램 국장 / 군축 코디네이터 / 북동지역 프로그램 국장 /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비군사화를 위한 실무그룹³⁾ 집행위원장

▪ 약력

- 매사추세츠 국민투표를 위한 예산 캠페인(Budget for All referendum in Massachusetts)⁴⁾ 주도
- 2012년 NATO 정상회의 기간 대향회의를 주관했던 NATO-Free Future 공동의장
- 미국 외교와 군사정책에 초점을 맞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패권 견제 활동, 핵전쟁 반대, 핵무기 금지,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 종료, 해외 주둔 군대 철수 등의 활동
- 인도차이나 지역, 한국, 중동, 중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거나 전쟁을 종료하자는 캠페인 주도
-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연대(United for Justice and Peace), 해외 군사기지 폐쇄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to Abolish Foreign Military Bases), NATO 반대-전쟁 반대 네트워크(No NATO-No War Network) 공동 창립자
- 핵무기 폐지 운동을 벌이는 Abolition 2000's Global Council 멤버

3) 선도적인 미국 평화 운동가들과 아시아계 미국인, 학자, 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4) 상위 2%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고 국방비 축소와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함으로써 필수 서비스를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의회에 요구하는 캠페인

- 2010년 NPT 재검토 회의 국제기획위원회 공동의장
- 조지타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전공, 유니언 대학에서 정치학과 국제안보로 박사학위 취득
- 저서
 - 제국과 폭탄: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하는가 (Empire and the Bomb: How the U.S. Uses Nuclear Weapons to Dominate the World)

리유 인투오(Liu Yintuo, 중국)

- 현직
 - 중국 시민단체연대회의 CANGO (China Association for NGO Cooperation) 연구부서 코디네이터 / 중국 NGO들의 구호 활동 및 재난 방지, 평화,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연구 중
- 약력
 - CANGO에서 일하기 전 2009년까지 하얼빈 공업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침
 - 2010년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미디어 훈련 교재 번역
 - 제8회 GPPAC 동북아 지역 회의에서 CANGO 베이징 담당자로 활동
 - 2011년 한중일 2011 시민사회 포럼에 중국 대표부 코디네이터로 참석
 - 2012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일 시민사회국제포럼 담당

아키라 가와사키(Akira Kawasaki, 일본)

- 현직
 - 일본 도쿄 소재 시민단체 피스보트(Peace Boat, www.peaceboat.org) 실행위원

/ 핵무기 폐지를 위한 국제캠페인(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공동의장

▪ 약력

- 2009-2010년 핵불확산-핵군축에 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NGO 고문
- 2011년 3월 11일, 쓰나미와 핵재앙 이후 후쿠시마 아이들을 돕는 피스보트 프로그램 진행
- 2012년 1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조직 및 개최
- 도쿄 게이센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일본 신문과 저널에 핵군축과 관련한 기사 기고

코라존 파브로스(Corazon Fabros, 필리핀)

▪ 현직

- 전쟁중단동맹 필리핀(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⁵⁾ 공동의장 / 아시아 유럽민중포럼(Asia Europe Peoples Forum) 평화안보 실무그룹 아시아 담당 / 시민평화감시단(Citizens Peace Watch)⁶⁾ 공동의장 / 핵 없는 필리핀(Nuclear Free Pilipinas)⁷⁾ 공동의장

▪ 약력

- 핵 없는 필리핀 연대(Nuclear Free Philippines Coalition) 전 사무총장으로 필리핀에 핵발전소 건설을 막는 성공적인 캠페인을 이끌었으며 필리핀 미군 기

5) 필리핀을 기반으로 평화와 사회정의, 핵폐기, 외국 기지 반대 및 필리핀의 독립적 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사회운동, 민중운동, NGO 등의 다양한 기관들로 이뤄진 네트워크

6) 미군을 비롯한 외국 군대의 존재와 간섭과 관련된 활동들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네트워크로 그리고 외국 군대 및 군사 시설이 필리핀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필리핀 헌법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로비 활동 및 동원 활동, 언론 대응 등을 하고 있음

7) 필리핀 에너지 믹스의 일환으로 필리핀에서 핵발전을 반대하는 주요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전기를 생산하는 주요 동력으로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채택할 것을 로비. 이 네트워크는 핵 없는 필리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지 폐쇄를 요구하는 캠페인 주도

이태호, 한국

▪ 현직

-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공동 집행위원장 등

▪ 약력

- 6·15공동선실천 남측위원회 정책위원(2005~)
- 미국 뉴욕 콜롬비아대학 방문연구원 역임
- 참여연대 입사(1995) 이래 부패방지운동을 담당하면서 그 일환으로 K1전차 개발, F-15해외구매 사업 등 국방계약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지원
- 2003년 참여연대 교평화군축센터 발족 이후, 군축과 안보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지향하는 기획사업과 연대사업을 기획 및 조직. 아프간 이라크 파병반대운동(2003~), 한국형헬기개발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테러방지법/테러자금 조달방지법 제정 반대운동, 국방개혁안에 대한 시민대안 제안,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운동 등 진행

▪ 저서

- 『2008시민평화백서』 (공저, 아르케, 2008), 『2010시민평화백서』 (공저, 검등소, 2010), 『천안함을 묻는다』 (공저, 창작과 비평, 2010), 『봉인된 천안함의 진실』 (공저, 한겨레출판, 2010), 주요 논문 혹은 보고서로는 “이라크반전평화운동과 한국 시민사회(2006, 世界)”, “국방개혁2020안의 6가지 문제점(국회 국방위 공청회 진술서 2006)”,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의 문제점(국회 재경위 공청회 진술서 2007)”, “평화국가만들기와 시민사회운동(시민과 세계 제10호, 2007)”, “대테러 전쟁과 미국의 시민운동(POSCO 청암재단 시민단체활동가 연수프로그램 연구보고서, 2009)” 등

Profile of Speakers

Joseph GERSON, USA

- Dr. Joseph Gerson has worked with 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 Nobel Peace Prize recipient, since 1976. He is Director of AFSC's Peace and Economic Security Program and also serves as AFSC's Disarmament Coordinator and Northeast Regional Director of Programs.
- He serves as convener of the Working Group for Peace and Demilitariz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a network of leading U.S. peace movement figures, Asian-Americans, scholars and religious leaders. He initiated the successful Budget for All referendum in Massachusetts which urged Congress to protect essential services, to invest in job creation and to pay for these by increasing taxes on the wealthiest 2%, cutting military spending, and bringing U.S. troop home. He was also co-convener of the Network for a NATO-Free Future, which organized counter-summit activities during the 2012 NATO summit.
- A leading public intellectual and peace campaigner, his work focuses on U.S. foreign and military policies, particularly challenging U.S. hegemony in the Asia-Pacific, prevention of nuclear war and achieving nuclear weapons abolition, withdrawal of foreign military bases, and ending the U.S. Central Asian wars.
- His scholarly work includes the publication of four books, most recently *Empire and the Bomb: How the U.S. Uses Nuclear Weapons to Dominate the World*. He has published numerous articles in the U.S., European and Japanese press and lectured in numerous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in more than fifty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He has taught at Regis and Holy Cross Colleges and Tufts University.

- A Vietnam-era draft resister, Dr. Gerson has been involved in numerous peace and campaigns and in helping to launch U.S. and international peace coalitions. These include campaigns to prevent and/or end wars in Indochina, Korea, th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He was a co-founder of the post 9/11 coalitions United for Peace and Justice, United for Justice and Peace, the International Network to Abolish Foreign Military Bases, and the No NATO-No War Network. He is a member of Abolition 2000's Global Council and served as Co-Convenor of the 2010 NPT Review Conference International Planning Committee, which organized a major international peace and justice conference, rally, and march on the eve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Review Conference at the United Nations. He works closely with peace and anti-bases movements across Asia and the Pacific and has frequently participated in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Atomic and Hydrogen Bombs in Hiroshima and Nagasaki.
- Dr. Gerson is 66 years old. He received his B.S. from Georgetown University's School of Foreign Service in 1968 and his Ph.D. in Politics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from the Union Institute and College in 1996.

Liu YINTUO, China

- Mr. Liu Yintuo is the coordinator of the Research Department of the China Association for NGO Cooperation(CANGO). He currently is doing further research on the prevention of disasters and relief activities of Chinese NGOs and peace and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 Before his working at CANGO, he was a teacher at the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until 2009. At CANGO he was involved in the translation

work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s (GPPAC) Media Training Manual in 2010. For the GPPAC Northeast Asia 8th Annual Regional Meeting, he was the coordinator of CANGO, GPPAC North East Asia Beijing focal point of the meeting. On 16 November 2011, the 2011 Civil Society Forum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was held in Seoul, South Korea. Liu Yintuo was the Chinese delegation coordinator and attended in the forum.

Akira KAWASAKI, Japan

- Executive Committee Member, Peace Boat
- Mr. Akira Kawasaki is an Executive Committee member of the Tokyo-based NGO Peace Boat, and a Co-Chair of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In 2009-2010, he served as an NGO Advisor to Co-Chair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ICNND). After the 11 March 2011 tsunami and nuclear disaster, he initiated Peace Boat's activities to help children of Fukushima and organized Global Conference for a Nuclear Power Free World in January 2012 as the Conference Director. He lectures at Keisen University, Tokyo, and frequently writes in Japanese newspapers and journals on nuclear disarmament.

Corazon FABROS, Philippines

- A lawyer by profession is a founding member of the National Union of Peoples' Lawyers in the Philippines. Currently, Lead Convenor of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a multi-sectoral coalition of Philippine-based social movements, NGOs, peoples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united on the issues of peace and social justice, nuclear abolition, opposition to foreign military bases and presence,

independent/nationalist Philippine foreign policy. Focal Person for Asia - Working Group on Peace and Security at Asia Europe Peoples Forum. Co-Convenor of the Citizens Peace Watch, a network that monitors, documents and exposes the activities of the US and other foreign military presence and intervention and mounts lobby, mobilizations and media work to push for the strict implementation of the Philippine Constitution prohibition of foreign military troops and facilities in the Philippines. Co-Convenor of Nuclear Free Pilipinas, a network of major organizations in the Philippines opposing nuclear power as part of Philippine energy mix and lobbying for the adoption of renewable energy as the main source of power generation. It seeks to realize a nuclear free Philippines.

- Former Secretary General of the Nuclear Free Philippines Coalition, which led the successful campaign to stop the nuclear power plant projects in the Philippines and was the campaign center for the rejection and removal of US military bases in the Philippines

Taeho LEE, South Korea

- Mr. Taeho Lee is the Secretary General of PSPD, a member for Executive Committee of the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of PSPD and a co-convenor of National Network of Korean Civil Society for Opposing to the Naval Base in Jeju Island. He has been a policy committee member of the South Korean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une 15 South- North Joint Declaration since 2005. He was also a visiting researcher at the Columbia University.
- After becoming a coordinator of PSPD in 1995, he was responsible for anti-corruption movement and especially protection of whistle blowers who disclosed corruption of the arms contract. With establishing the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of PSPD in 2003, he has organized

various projects concerning disarmament and the democratic control of the security power. His efforts for peace and disarmament are campaign against War on Iraq and Afghanistan(2003-), campaign against development of the Korean helicopter, movement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the naval base in Jeju Island, and movement against the legislation of the anti-terrorism and anti-money laundry for terrorism while proposing civil alternatives for the military reform and raising questions on the sinking of the Cheonan warship investigation.

- He is the author of several books including '2008 Civil White Paper of Peace'(co-author, 2008), '2010 Civil White Paper of Peace'(co-author, 2010), 'Raise Questions on the Cheonan Warship'(co-author, 2010), 'The Sealed Truth of the Cheonan Warship'(co-author, 2010). He also wrote many articles including 'Movement against War on Iraq and the Civil Society of Korea'(2006, 世界), 'The Major Six Problems of the Military Reform'(parliamentary report, 2006), 'The Problems of the legislations of anti-money laundry for terrorism'(parliamentary report, 2007), 'Making a Peace State and Civil movement'(Citizen and the World, 2007), 'War against terrorism and US civil movement'(research paper for the POSCO Foundation, 2009).

Note
